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호주 외교통상부 미얀마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2025년 4월 7일

목차

약어	4
용어	5
1. 목적 및 범위	6
2. 일반 정황	7
국가 개요	7
인구통계	8
경제 개관	8
정치 체제	11
인권 프레임워크	12
치안 상황	13
3.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 사유	17
인종/국적	17
종교	22
(실제 또는 전가된) 정치적 견해	25
관심 집단	32
4. 보충적 보호 사유	38
자의적 생명 박탈	38
사형	39
고문	39
5. 기타 고려 사항	41
국가 보호	41
국내 재정착	43
귀환자 대우	44
신분 증명 서류	45
만연한 사기	48

약어

AA	여카잉군(Arakan Army)
ARSA	아라칸 로힝야족 구원군(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
BGP	국경경비대(Border Guard Police)
CDM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
CSC	시민권심사카드(Citizenship Scrutiny Card)
DPMNS	미얀마 신사회민주당(Democratic Party for Myanmar New Society)
CTFMR	감시 및 보고를 위한 국가 태스크포스(Country Task Force on Monitoring and Reporting), 무력 분쟁 시 아동에게 자행된 중대한 침해를 감시하고 보고할 권한을 가진 유엔 기구
EAO	소수민족 무장단체(Ethnic Armed Organisation)
ICNV	국가검증신분증(Identity Card for National Verification)
KHRG	카렌인권단체(Karen Human Rights Group)
KIA	카친독립군(Kachin Independence Army)
KNLA	카렌족해방군(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
KNU	카렌민족동맹(Karen National Union)
MNDAA	미얀마민족민주연합군(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MNHRC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CA	전국적 휴전 협정(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NLD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RC	국민등록증(National Registration Card)
NUG	국가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NVC	국가검증카드(National Verification Card)
PDF	시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 국가통합정부(NUG)의 무장 조직으로 다수의 무장 단체로 구성됨
SLORC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TNLA	타양족해방군(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TRC	임시등록증(Temporary Registration Card)
USDP	연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WSA	와연방연합군(United Wa State Army)
VPN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용어

마바타(Ma Ba Tha)	국적 및 종교 보호 위원회의 버마어 약어로,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의 불교 승려들이 주도하는 조직
마드라사(Madrassa)	모스크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무슬림 학교, 대학 또는 종합대학
삐다웅주 흘룻또 (Pyidaungsu Hluttaw)	미얀마 연방의회
썬조디(Pyu Saw Htee)	시민방위군(PDF)에 대응하기 위해 군부와 그 대리인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훈련시키며 무장시킨 친정부 민병대
탓마도(Tatmadaw)	미얀마군

기타 용어

높은 위험	호주 외교통상부가 강력한 반복적 사건의 양상을 인지
중간 정도의 위험	호주 외교통상부가 충분히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건들을 인지
낮은 위험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사건 발생을 인지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

공적 차별

1.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국가의 보호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나 규제 조치(예컨대 개인 신상 등록이나 신분증 취득의 어려움, 서류 불인정 및 자의적 체포와 구금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2. 공무원이 특정 집단에게 입법 조치나 행정 조치를 불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국가의 보호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사회적 차별

1. 가족, 고용주, 서비스 제공자 등 사회 구성원이 특정 집단으로 하여금 다른 사회 계층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예컨대 부동산의 임대 거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거부, 고용 차별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2. 가족, 지인, 고용주, 동료, 서비스 제공자 등 사회 구성원이 행하는 배척이나 배제 행위

1. 목적 및 범위

1.1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는 오로지 보호 지위 인정 심사에 활용할 목적으로만 본 국가정황정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본 보고서는 작성 당시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내린 최선의 판단과 평가를 반영하며, 미얀마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

1.2 본 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정황을 포괄적으로 다룰 뿐, 해당 국가에 관한 내용을 총망라하지는 않는다. 본 보고서는 호주 난민심사관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난민 신청 사례 전반을 고려해 작성했으며, 보호 사증을 신청한 개별 사례는 직접 다루지 않았다. 본 보고서에는 난민심사관을 위한 별도의 정책 가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3 호주 「1958년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499조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공표된 제84호 장관 지침(Ministerial Direction Number 84)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호주 외교통상부가 보호 지위 인정 절차에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국가정황정보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보고서가 난민심사관에게 제공되는 경우, 해당 난민심사관은 인정 여부가 심사 내용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보고서를 참고해야 한다. 난민심사관이 해당 국가와 유관한 기타 정보를 고려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1.4 본 보고서는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현장에서 습득한 정보와 미얀마 및 제3국에 소재한 여러 정보원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또한 유엔국제조사위원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및 유엔난민기구(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등 기타 관련 유엔 기구,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및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공인된 인권 단체, 명망 높은 언론기관 등 정부와 민간 기관 등에서 얻은 정보도 반영했다. 보고서에서 정보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보 출처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일 수 있다.

1.5 본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개정판은 2022년 11월 11일에 발표된 기존 호주 외교통상부(DFAT) 미얀마 보고서를 대체한다.

2. 일반 정황

국가 개요

2.1 미얀마(과거 버마로 알려짐)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원래는 의회 공화국이었다. 1962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문민정부가 전복됐고, 네 윈(Ne Win) 장군의 통치 하에 전체주의적 성향의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됐다. 독립 이후 미얀마는 장기간 군부 통치와 내부 분쟁, 국제적 고립을 겪었다.

2.2 1988년 광범위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 네 윈이 사임했다. 따마도(Tatmadaw)라고 불리는 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를 수립하고 강경 탄압을 자행해 약 3,000명을 살해했다.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지도자이자 독립 영웅 아웅 산의 딸인 아웅 산 수 치가 명성을 얻은 시기가 바로 이 때였는데, 그 뒤로 아웅 산 수 치는 20년 가까이 양곤(Yangon)에서 가택연금 생활을 하다가 2010년 테인 세인(Thein Sein) 정권 시기에 석방됐다.

2.3 2015년 11월, 미얀마에서 총선이 실시됐다. 신뢰성을 널리 인정받은 선거가 열린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는데, 선거 결과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었다. 아웅 산 수 치는 그녀를 배제하기 위해 작성된 헌법 조항(‘정치 체제’ 참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었지만,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으로 임명됐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는 폭넓은 지지를 받았지만, 개혁에도 소극적이었고 장기간 이어진 소수민족 반란을 진정시킬 국가 차원의 평화 협상도 지지부진했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라카인(Rakhine)주의 로힝야(Rohingya)족에 대한 대규모 잔학 행위를 예방하지 못해 국제적 비판을 받았는데,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약 70만 명이 이러한 잔학 행위를 피해 국외로 탈출했다.

2.4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집권 후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아웅 산 수 치가 대통령이 될 기반을 닦으려 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20년 11월 선거에서 또다시 압승하자, 군부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승리를 부정하고 2021년 2월 1일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총사령관의 지도 하에 권력을 장악했다. 아웅 산 수 치 및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지도자들은 구금됐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국제 사회는 쿠데타를 규탄했고 미얀마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으나, 군부 정권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과 소수민족 정당 대표들은 이에 맞서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NUG)’로 불리는 망명 정부를 구성했다.

2.5 2021년 9월, NUG는 군부 정권에 대한 무장 혁명 투쟁을 선언했다. 무장 투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미얀마군과 다양한 소수민족 무장단체(ethnic armed organization, EAO) 간에도 전투가 재개됐다. 현지 및 국제사회에서 사태를 관측한 이들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군부 정권 병력은 무차별 공습, 초법적 살인, 자의적 구금, 고문을 비롯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2023년 8월, 군부 정권은 약속했던 선거가 계속되는 폭력 사태로 인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2.6 2023년 말, 일련의 무장 단체가 미얀마군에 대한 공격 작전을 개시하면서 분쟁이 상당히 증가했다. 2025년 1월 기준, 이들 단체는 산(Shan)주, 라카인주, 카친(Kachin)주, 친(Chin)주, 카렌(Kayin)주 및 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서 상당한 영토를 계속 점령하고 있었으며, 군부 정권은 라쇼(Lashio)와 안(Ann)의 지역 군 사령부와 라웃가잉(Laukkai), 모곡(Mogok), 단웨(Thandwe), 부디다웅(Buthidaung) 등 주요 도시의 사령부들을 상실했다. 2025년 1월까지 유엔은 350만 명 넘는 사람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이 중 320만 명 이상이 2021년 2월 1일 이후 실종된 것으로 보고했다. 본 보고서 발행 시점 기준, 미얀마 전역의 치안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인구통계

2.7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에서는 2024년 미얀마 인구가 5,8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한편 2024년 인구 조사에서 잠정적으로 산출한 인구는 5,130만 명으로 나타났다. 미얀마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양곤(560만 명)이며, 만달레이(150만 명), 수도인 네피도(Nay Pyi Taw)(92만 5,0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2.8 미얀마는 다문화·다언어 국가이다. 100개 이상의 언어가 쓰이며,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가 많다. 국어는 버마어로, 약 3,200만 명이 모국어로 사용한다. 식민지 시대에 교육에 사용된 언어는 영어였으나 독립 후 버마어로 바뀌었다. 오늘날 영어를 구사하는 인구는 약 5%에 불과하다. 민족별 인구통계는 '인종/국적' 항목을, 종교별 인구통계는 '종교'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경제 개관

2.9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최빈국에 속하며, 1인당 GDP가 1,190달러(1,900호주달러)에 불과하다. 농업, 임업, 어업이 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체 노동자의 2/3이 이 분야에 종사한다. 기타 주요 산업으로는 광업, 건설업, 섬유 산업이 있다. 또한 불법 마약, 보석, 인신매매, 야생동물 밀매, 불법 벌목 등 분야에서 그림자 경제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경제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심하게 위축됐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2.10 쿠데타 이후 경제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많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2년까지 전체 가구 중 거의 절반이 소득 감소를 겪었으며, 반 이상이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의 지출을 제한하거나 자산을 매각해야 했다고 보고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았고, 연료 가격은 상승했으며, 본 보고서 발행 시점에도 많은 가구가 식량 확보 문제를 우려했다.

2.11 경제가 침체하자 실업도 만연했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미얀마 인구 중 잠재적 노동 인구가 900만 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노동참여율은 1.6% 하락했고 실업률은 4.8% 상승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2020년 60%에서 2022년 55%로 하락했다. 2024년 현재 인구의 약 50%가 국가 빈곤선(하루 1,590짖) 이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12 유엔개발계획(UNDP) 2021~22년 인간개발지수(본 보고서 발행 시점에 입수 가능했던 최신 자료)에서 미얀마는 191개국 중 149위로 평가되어 인간개발 중위권 국가군 중 하위권을 차지했다. 미얀마의 기업환경평가지수(Ease of doing business)는 2021년 쿠데타 이후 크게 악화됐으며, 경제 체제는 대체로 규칙에 기반한 시장 체제에서 부패·독점·지대 추구가 특징인 체제로 이행했다.

2.13 2021년 세계기후위험지수(본 보고서 발행 시점에 입수 가능했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는 사이클론, 홍수, 산사태를 비롯한 극한 기상 현상을 겪을 위험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2024년 9월, 태풍 야기(Yagi)로 인해 미얀마에 심각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약 89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약 384명이 사망하고 89명이 실종됐다. 2023년 5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모카(Mocha)로 인해 4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으며, 피해액은 약 37억 호주달러에 달했다. 2008년 5월에는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로 인해 8만 4,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

2.14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11배 증가했으나 2021년 쿠데타 이후 대폭 감소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미얀마는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두 개를 운영했다. 모자현금지원(Maternal and Child Cash Transfer, MCCT)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 기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산모에게 월 1만 5,000짖(11호주달러)을 지급했고, 국민사회연금(National Social Pension, SP) 프로그램을 통해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 짖(8호주달러)을 지급했으나, 두 프로그램 모두 2021년 쿠데타 이후 중단됐다.

2023년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 지급이 재개됐으나,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급은 간헐적으로 이뤄졌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를 수령했다고 한다.

보건

2.15 미얀마 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과 가용성은 2021년 쿠데타 이전에도 취약했으며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부족, 의약품 및 장비 공급망 혼란, 본인 부담 비용 증가, 무력 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 접근성 악화 등이 특히 중대한 문제로 꼽힌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양곤에서는 대체로 아직까지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오르고 접근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대다수 농촌 주민은 마을 진료소를 통해 1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교통 혼란, 긴 대기 시간, 높은 본인 부담 비용으로 인해 병원 진료에 대한 접근성은 감소했다. 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줄어든다.

2.16 결핵, 말라리아, HIV/AIDS 같은 감염병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024년에는 콜레라 발병 사례도 다시 나타났다. 미얀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았다. 기록상 확진자는 64만 건 이상, 사망자는 거의 2만 명에 달했으나 실제 수치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인구의 약 64%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했다. 당뇨병, 암, 심장병 등 비감염성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

2.17 의료 인력이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 CDM)에 참여하면서, 공공 보건 의료 체계는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민간 병원은 넘쳐나는 환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지역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운영하는 보건 의료 체계는 분쟁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여러 건의 검증된 보고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는 의료 인력을 공격하고 살해하며 의료 시설을 포격한 바 있다. 의료 인력은 군부 정권의 심문, 체포, 폭력의 표적이 되며, 시민불복종운동(CDM)과 관계가 있거나 반정부군을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반정부군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미얀마군 병사들이 분쟁 지역 의료진을 약식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보고에 대해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인지하고 있다.

2.18 분쟁, 계엄령 또는 통행금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모와 아동 건강은 악화했는데, 특히 여성은 폭력과 불안정한 상황을 피하느라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의료 장비·백신·의약품 공급도 국내외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여 심한 타격을 입었다. 2022년 11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미얀마에 필수 의약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국내 보건 프로그램 전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9 성·생식 보건 의료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다. 낙태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이다. 위험하고 불법으로 이뤄지는 낙태는 미얀마에서 산모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피임약은 구하기 어려우며, 쿠데타 이후,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특히 구하기 어려워졌다. 쿠데타뿐만 아니라 공급망 혼란에 따른 의료 용품 공급 문제로 인해 성·생식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NGO)와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여성’ 항목도 참조).

2.20 여러 보고에 따르면, 미얀마 당국은 분쟁 지역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구할 의약품과 백신을 고의로 공급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한다.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현지 정보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는 군부 정권의 국가 정책으로, 정권이 주민 저항에 부딪히는 지역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부 최고위급에서 규정했다고 하며 그 결과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질병의 발병률이 상승했다고 한다.

정신 건강

2.21 미얀마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편이며, 분쟁, 코로나19,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그 수치가 더욱 높아졌다. 2020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양곤에서는 18세~49세 인구의 18%가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2023년 미얀마 전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4분의 1이 중간 내지 고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둘 다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자살률도 쿠데타 이후 급증한 것으로 보고됐다.

2.22 현행 정신 건강 관련 법규는 「정신이상자법(Lunacy Act, 1912)」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는 제한되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미얀마에는 정신병원이 단 두 곳 밖에(양곤과 만달레이) 없었고, 임상 수련을 받은 심리학자는 8명, 공공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는 150명 미만이었다. 비정부기구(NGO)들이 라카인주의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 수용소를 포함해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상담과 기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버마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는 드물다.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낙인을 자주 경험했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치료를 기피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으며, 많은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마법이나 악령이 일으키는 것이라는 전통적 믿음을 고수한다.

HIV/AIDS

2.23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도 HIV 감염률이 특히 높은 국가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0.9%가 HIV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는 HIV 감염인의 74%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분쟁, 실형,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 2022년 이후에는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이 확실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24 HIV 감염인은 흔히 낙인과 차별을 경험한다. 한 예로,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설문 조사 대상자 중 HIV 양성인 상인이 파는 채소는 사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0%를 넘었다. 낙인 외에도 분쟁, 공중 보건 자금 부족, 정부 시설 부족, HIV 감염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정부의 간섭, 성매매 불법화, 동성간 성행위 불법화가 치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여성' 항목과 '성소수자(LGBTQIA+)' 항목도 참조).

교육

2.25 미얀마의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2021년 쿠데타 이후 현저히 악화했다. 코로나19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 데다 수십 년간 교육이 방치되고 분쟁까지 일어나면서, 학교는 자원이 부족하고 교사는 충분한 훈련과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비효과적인 교수법과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과정 및 교재를 사용한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얀마 5학년생의 90% 이상이 기초 문해력과 산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2.26 2021년 쿠데타 직후 교사 약 20만 명이 군부 정권에 항의해 직장을 이탈하자 전역에서 많은 학교가 폐쇄됐다. 국민통합정부(NUG)에 따르면 2023년에도 약 13만 명이 여전히 시민불복종에 참여하고 있었다. 2023년 말에 이르러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 SAC)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재개교했고, 아웅 4분의 3이 학교로 복귀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은 자체 학교 체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친주(Kachin)와 까야주가 그 예이다.

2.27 학업 중단율은 매우 높아서, 학생 절반이 고등학교 진학 전에 중퇴하고 고등학교 최종 학년까지 마치는 학생은 10%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성별 격차가 별로 없지만, 대학 진학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 학교 등록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크며, 농촌이나 빈곤 가정 출신 젊은이들은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낮다. 대학 등록은 쿠데타 이후 급감했으며, 교육부가 2023년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90% 감소했다.

2.28 쿠데타 이후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미얀마 여러 지역에서는 교육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사가잉(Sagaing), 친주(Chin), 머궤(Magway), 까인주(Kayin), 까야주에서는 전투와 공습으로 인해 공립학교가 2023년에도 계속 폐쇄 상태였다. 공격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연합(Global Coalition to Protect Education from Attack, GCPEA)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 교육 시설에 가해진 무장 공격은 450건 이상이며 이는 대부분 군부 정권 병력이 자행했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군부 정권은 자주 의도적으로 학교를 공습의 표적으로 삼았으며, 학생과 교사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미얀마 위트니스(Myanmar Witness) 프로젝트에서 분석한 결과, 군부 정권이 학교를 대상으로 공격한 건수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꾸준히 증가했다.

정치 체제

2.29 2021년 2월 1일,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이끄는 군부 정권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다수당인 의회가 소집되기 몇 시간 전에 미얀마 정부 조직을 장악했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군부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워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군부가 국가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미얀마는 사실상 군부 독재 국가가 됐다.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이 쿠데타가 ‘법치와 국제법과 미얀마 헌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2.30 2021년 쿠데타 다음 날, 군부는 ‘국가행정위원회(SAC)’라는 행정 통치 기구가 미얀마를 지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AC는 군 장교 9명과 민간인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인 위원들은 다양한 소수민족 집단 및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경쟁 정당에서 선발됐다. 국가행정위원회(SAC)의 구성원은 수차례 사보임됐고, 내각을 포함해 민 아웅 흘라잉이 설치한 기타 기구도 쿠데타 이후 여러 차례 개편됐다. 2024년 7월, 민 아웅 흘라잉은 자신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선포했다.

2.31 2021년 8월 1일에 민 아웅 흘라잉은 소위 ‘과도 정부’의 총리로 선포됐는데, 과도 정부는 2023년 2월까지 비상사태 체제로 국가를 통치한 후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총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2025년 본 보고서 발행 시점에서 이러한 선거는 아직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국가 비상사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차례 연장됐다. 2024년 6월, 민 아웅 흘라잉은 2025년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에 선거가 실시된다고 해도 군부 정권의 통제 하에 있는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사태를 관측하는 이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이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2.32 2021년 2월,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 약 300명이 연방의회대표위원회(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taw, CRPH)를 구성하고 이를 미얀마의 정통 입법 기관으로 선언했다. 2021년 4월,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국민통합정부(NUG)라는 망명 정부 수립을 발표했는데, 망명 정부에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수민족 집단, 시민사회, 군소 정당 등의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민간 대표,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지방 통치 집단, 망명 정치인들로 구성된 국민통합자문위원회(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 NUCC)라는 감독 기구를 설립해 국가통합정부(NUG)를 감독하도록 했다. 국가통합정부(NUG)와 그 대표들은 미국, 영국, 호주,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및 기타 국가의 공직자와 회담한 바 있다.

2.33 2021년 9월, 국가통합정부(NUG)는 군부 정권에 맞서 전국적 무장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시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 PDF)’ 부대가 투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SAC는 국가통합정부(NUG)와 시민방위군(PDF)을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및 국가통합자문위원회(NUCC)와 더불어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안보 상황’ 항목과 ‘정치적 견해’ 항목도 참조).

2.34 행정상 미얀마는 7개 행정주, 7개 자치주, 6개 소수민족 자치지역 그리고 1개의 ‘연방 직할지’(수도 네피도 소재)로 나뉜다. 6개 자치구역/자치구는 소수민족 집단이 통치하며, 5개는 산주 내에, 1개는 사가잉 지역 내에 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EAO)는 국내 여러 지역을 지배하며, 사실상의 독립 정부처럼 운영되어 의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치안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무장 단체’ 항목도 참조).

2.35 각 주와 지역에는 선출된 공무원과 임명된 행정관으로 구성된 자체 입법부가 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많은 지역 및 지방 공무원이 군부 정권에 체포되거나 사임했는데, 쿠데타에 항의하다가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여러 시민방위군(PDF)에게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받아 그렇게 된 경우도 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지배하는 지역 중 몇몇은 지방 및 지역 대표를 선거로 선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패

2.36 사소한 뇌물 수수부터 대규모 부정부패까지, 부패는 미얀마 사회의 어디에서나 만연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23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미얀마를 180개국 중 162위로 평가했다. 2020년도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설문 조사 대상자의 20%가 지난 12개월 사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뇌물을 건넨 적이 있다. 부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서는 공무원의 낮은 급여, 복잡하고 번거로운 관료적 절차, 무력 분쟁, 선물 제공과 '차 값' 같은 관습, 서로 다른 '수준'의 시민권('인종/국적' 항목 참조), 그림자 경제의 성장 등이 있었다.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부패 정도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악화했다('문서 위조 만연' 항목도 참조).

2.37 2021년 2월 쿠데타 이전,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는 2013년에 「반부패법(Anti-Corruption Law)」을 제정하고 2014년에 반부패위원회(ACC)를 설립하는 등 반부패 조치를 추진했다. 쿠데타 이후 ACC는 다른 여러 공공 기관과 마찬가지로 숙청됐고, 구성원은 군부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교체됐다. 2023년 말에는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의장, 무역 및 상품의 원활한 흐름 보장을 위한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on Ensuring the Smooth Flow of Trade and Goods) 공동사무총장, 상무부 차관 등 정권의 여러 고위급 인사가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 현지 정보원은 이러한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했다. 군부 정권은 2023~24년에도 부패 혐의 및 탐욕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혐의로 민간 부문 행위자들을 계속해서 체포했다.

인권 프레임워크

2.38 「2008년 헌법」은 종교의 자유,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기본권은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침해된다.

2.39 미얀마는 유엔 핵심 인권 조약 중 4개를 비준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4개이며,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도 비준했다. 상기 협약 이행은 지지부진하다.

국가인권제도

2.40 미얀마는 2011년에 정부 출연 기관인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MNHRC)를 설립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MNHRC)는 민원을 접수하고, 인권 유린 사건을 조사하며, 미얀마가 당사국인 조약·협약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기타 조약·협약 가입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교도소, 구금 시설 및 기타 감금 장소에 대한 조사도 수행할 수 있다.

2.41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MNHRC)는 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사항을 전달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만, 권고사항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MNHRC)는 로힝야족에 대한 핍박이나 2021년 쿠데타 이후 발생한 인권 유린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실시한 검토에서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MNHRC)는 'B'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MNHRC)가 국가 인권 기구의 모범 운영 기준을 담고 있는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지 정보원은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MNHRC)가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고 무능하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혔다.

치안 상황

2.42 1948년 독립 이래 미얀마는 반복적 분쟁의 영향을 받아왔다. 차별적 정책, 불평등, 정치적 권리 박탈, 토지·자원·합법적·불법적 시장을 차지하려는 싸움 등의 요인으로 촉발된 소수민족의 반란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전국 각지의 세력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켜 군부 정권과 공직자들을 공격하고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했다. 군부 정권만이 인권 유린에 가담한 행위자는 아니지만, 현지 및 국제사회에서 사태를 관측한 이들 대다수는 미얀마의 인권 및 국제인도법 침해 사건 중 절대 다수는 군부 정권의 잘못이라고 인식한다.

2.43 본 보고서 발행 시점 기준, 미얀마에는 군부 정권이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무장 단체들은 미얀마가 중국,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 등과 접하고 있는 국경을 따라 활동한다. '버마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 만달레이, 양곤, 사가잉, 머궤 등지는 한때 비교적 평화로웠으나, 2021년 쿠데타 이후로 지역 시민방위군(PDF)과 보안군이 전투를 벌이고 군부 정권이 적대 세력 지지자로 간주하는 민간인을 거남함에 따라 급증하는 폭력에 시달려왔다. 2024년 말 현재 계엄령은 양곤과 만달레이의 일부를 포함해 전국 약 61개 지구에서 시행 중이다.

무장 단체

2.44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무장 단체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와 시민방위군(PDF)은 약 20개로 추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소수민족 무장단체(EAO)로는 여카잉군(Arakan Army, AA), 카친독립군(Kachin Independence Army, KIA), 카렌민족동맹/카렌민족해방군(Karen National Union/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 KNU/KNLA), 타앙족해방군(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TNLA), 와연방연합군(United Wa State Army, UWSA) 등이 있다.

2.45 많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와 몇몇 시민방위군(PDF)은 대규모이고, 잘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군대 및 다른 무장 단체로부터 해당 지역민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통제 지역 내에서 국가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정치 체제' 항목 참조) 세금을 징수하며 합법·불법 무역을 통제한다. 종족 중심의 민족주의 군대와 범죄 조직의 경계는 흐릿할 경우가 많으며 조직마다 상황이 다르다. 무장 단체 관계자들은 인권 유린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바 있다.

2.46 2021년 5월 5일, 국가통합정부(NUG)는 정부 무장 조직으로서 시민방위군(PDF)을 설립한다고 발표하면서 시민방위군(PDF)의 목적은 군부 정권 및 국가행정위원회(SAC)의 통제를 받는 다른 세력이 자행하는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 생업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부 정권을 전복하고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EAO)를 통합하는 '연방 연합군' 수립이 정부의 장기 목표라고 밝혔다.

2.47 시민방위군(PDF)은 표면상 국가통합정부(NUG) 사령부의 지휘를 따르며, 지역 사령부는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중부 등 5개로 나뉜다. 실제 시민방위군(PDF)은 수백 개의 소규모 '시민방위군들(PDFs)'과 현지 저항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통합정부(NUG)에 충성하는 정도, 통제받는 정도가 제각기 다르다.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시민방위군(PDF)은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도시 내 지하조직에서, 현대식 경무기로 무장하고 전투원 수백 명을 보유한 잘 조직된 대규모 민병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시민방위군(PDF) 신병 다수는 원래 급진적이지 않았던 청년이었으나 군부 정권의 핍박으로 인해 폭력을 써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미국평화연구소(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는 2022년 보고서에서 시민방위군(PDF) 전투원이 약 6만 5,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48 시민방위군(PDF)은 2021년에 설립된 이래 보안군과 직접 교전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며, 군인·경찰·정권 공직자를 대상으로 총격과 급조폭발물(IED) 공격을 가했다. 또한 정권 지지자 및 정권의 부역자이거나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암살했다. 2024년 4월에는 시민방위군(PDF)의 드론 공격이 네피도 공항 방어망을 뚫었다. 국가통합정부(NUG)의 행동 강령에서 지시한 대로라면 시민방위군(PDF)은 민간인 공격을 자제해야 하지만, 시민방위군(PDF)의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민간 기반 시설도 표적이 된 바 있다. 시민방위군(PDF)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로부터 무기를 지급받고 훈련을 받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단체와 함께 군부 정권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특히 산주, 까인주, 친주, 까야주, 카친주에서 이런 사례가 많았다. 분쟁 초기에는 시민방위군(PDF)이 잘 훈련되지 않고 무기도 구식이거나 즉석에서 만든 경우가 많았지만, 2023년에 현지 정보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술, 무기, 훈련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군부 정권 병력에 점차 효과적으로 맞선다고 한다.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와 국가통합정부(NUG)에 동조하는 시민방위군(PDF) 외에도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현지 무장 단체들이 있다. 이 중 몇몇은 시민방위군(PDF)을 자칭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국가통합정부(NUG) 휘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2.49 군부 정권이 후원하는 민병대, 일명 ‘뽀조디 (Pyu Saw Htee)’가 방화, 표적 암살, 민간인 공격, 허위 정보 유포에 가담한다고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했다. 2022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뽀조디는 ‘현역 및 퇴역 군인, 공무원, 군부의 대리 정당인 연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당원, 극단적 민족주의자, 임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또한 동 보도는 미얀마군이 뽀조디를 무장·훈련시켰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50 뽀조디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가담했다. 비영리 연구 단체인 데이터 포 미얀마(Data for Myanmar)는 뽀조디처럼 정권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전국에서 7,000채 이상의 가옥을 불태운 주체라고 보고했다. 2024년 2월에는 제복을 입은 군인이 머궤(Magway)의 간고(Gangaw) 지구 주민 앞에서 저항군 두 명을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는데, 영상에 등장한 증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뽀조디 대원이라고 한다.

무력 분쟁

2.51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무력 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민간인도 6,000명이 넘는다. 분쟁에 관련된 폭력으로는 무장 단체와 보안군 간 전투, 정권에 연계된 민병대/민병대가 가하는 공격,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 포병·박격포·지대지 미사일 공격, 급조폭발물(IED)과 표시 없는 지뢰, [납치, 고문, 성폭력, 초법적 살인, 가옥과 \(학교 및 종교 건물을 비롯한\) 건물 소각](#), 고정익 항공기·헬리콥터·드론 공습이 있다. 2023년에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군부 정권은 저항 단체를 지지하는 민간인을 겨냥함으로써 저항 단체의 식량·자금·정보·신병 확보를 차단하는 ‘4대 근절’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52 군부의 공습은 2023년에 증가했는데, 미얀마군의 대규모 지상 작전 수행 능력이 감소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D)는 2023년에 항공기 또는 드론 공격이 1,000건 넘게 있었다고 기록했는데, 2022년보다 두 배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공격은 대체로 민간인 및 민간 기반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겨냥했기에 국내외 관측통들의 지탄을 받았다. 군부는 저항 세력의 기지와 훈련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교회, 난민 수용소를 겨냥하여 공습했다. 2023년 4월, 사가잉에서 반군이 점거한 건물이 공습당해 16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 중 많은 이가 민간인이었다.

2.53 2023년 10월, 3개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즉 여카잉군(AA), 태양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연합군(MNDAA)이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을 맺고 산주에서 국가행정위원회(SAC) 병력을 합동 공격했다. '1027 작전(Operation 1027)'으로 불린 이 공격 이후 미얀마 다른 지역에서도 반군부 단체들이 군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1027 작전으로 인해 국가행정위원회(SAC)는 영토·인력·무기·차량을 상당 부분 상실했고 위신과 사기도 크게 하락했다. 2024년 1월,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은 라웃까잉시를 포함해 산주 북부 고강(Kokang) 지역을 점령했으며, 현지 언론은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 전투원이 정부군을 2,000명 이상 생포했다고 보도했다. 2024년에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은 1027 작전의 2단계에 돌입하여 라쇼에 있는 군부 정권의 북동부 지역작전사령부(Regional Operations Command, ROC)를 점령했다. 이는 독립 이후 미얀마군이 지역작전사령부(ROC)를 상실한 첫 사례였다. 또한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은 수익성 높은 루비 광산 도시 모곡을 비롯해 만달레이 지역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다.

2.54 라카인주에서는 여카잉군(AA)이 2023년 11월에 공격 작전을 재개했다. 2024년 7월,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는 여카잉군(AA)이 라카인주 영토의 50~75% 및 인도와 접한 친주 남부 영토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추정했다. 미얀마군은 여카잉군(AA)에 여러 기지와 무기 저장고를 넘겼으며, 일부 미얀마군 및 국경경비대는 이웃 국가인 방글라데시와 인도로 도피했다.

2.55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국내실향민은 2024년 6월 기준 290만 명 이상이다. 여기에는 쿠데타 전후 분쟁으로 인해 인접 국가로 피한 113만 9,000명도 포함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에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연쇄 실향(multiple displacement)'도 흔하게 일어났으며, 전투와 공습을 피해 많으면 열 번이나 이주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실향민은 충분한 식량, 의약품, 보건의료, 교육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2.56 지뢰와 불발탄(Unexploded Ordinance, UXO) 사고 위험이 미얀마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뢰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2022년에 40% 증가했다. 현지 정보원은 네피도를 제외한 미얀마의 모든 주와 지역이 지뢰와 불발탄(UXO) 오염 피해를 입었다고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혔다. 모든 분쟁 당사자들은 지뢰를 사용하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부상·장애가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가옥과 농지가 못쓰게 되며 가축도 죽고 다치고 있다.

2.57 폭발 및 기타 보안 사건은 양곤에서도 발생하고 미얀마 다른 지역에서는 더 빈번하다. 공격의 위치와 강도는 예측할 수 없다.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양곤에서 월평균 14건의 급조폭발물(IED) 공격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군부 보안군이 대규모로 주둔하는 네피도는 미얀마 여타 지역에 비해 안전하다고 간주되지만, 반정부군은 2024년 4월 네피도 주둔 군부 병력에 일련의 드론 공격을 실시했다. 반정부군은 군 검문소, 기차역, 철도도 공격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 정권에 동조하는 무장 단체들은 급조폭발물(IED) 공격 및 총격을 빈번히 가하며, 이에 따라 2023년 국제 안보 분석가들은 미얀마 전국에서 군부 정권 병력과 반정부군 병력 간 보복 폭력의 악순환이 격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폭력적·조직적 범죄

2.58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법 질서는 미얀마 전역에서 심각하게 무너졌고, 무장 강도 및 기타 폭력 범죄가 급증했으며 마약 복용 및 밀매도 상당히 증가했다. 당국은 비정치적 범죄에 대응할 능력도 의지도 부족하며,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매우 낮으므로 피해자가 범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강간과 살인 같은 심각한 범죄조차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59 조직 범죄는 미얀마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미얀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아편 생산국이자 가장 큰 메스암페타민 생산국이다. 불법 벌목, 채굴, 야생동물 밀수는 도처에서 벌어지며, 2023년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소수민족 무장단체(EAO)도 정권 공직자도 모두 가담하고 있다. 범죄 조직은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수천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온라인 및 전화 사기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들 중 다수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억류된 인신매매 피해자이다.

2023년 10월, 1027 작전의 일환으로 몇몇 센터에서 중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수천 명이 풀려났고(‘안보 상황’ 항목 참조) 4만 명 이상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고리대금업 범죄 조직도 미얀마에서 활동하며,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된 경우도 있다. 고리대금업자들은 합법·불법 도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시민 소요

2.60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뿐만 아니라 여러 소도시에서도 일어났다. 현지 및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몇몇 시위에는 무려 15만 명이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 인력과 공무원들은 전국에서 시민불복종운동(CDM)을 시작했고, 철도 노동자, 환경미화원, 은행 직원, 전기 노동자 등도 합류했다.

2.61 군부 정권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제한, 시위자 체포와 구금, 허위 정보 유포, 시위자 및 응급 구조 대원 구타, 고문, 살해 등의 방식으로 시위 운동에 가혹하고 폭넓게 대응했다. 대규모 시위는 2021년 말에 이르러 대체로 멎었지만, 2024년 기준, 시위자들은 당국에 체포·고문·구금될 위험을 무릅쓰고 전국에서 간헐적으로 ‘플래시몹’ 시위를 계속 조직했다(‘정치적 견해’ 항목도 참조).

인신매매

2.62 미얀마는 인신매매의 주요 공급국이자 목적국이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존재하고 때때로 집행되기도 하지만, 2023년도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미얀마를 3등급 국가로 분류했으며, 미얀마는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도 유의미하게 기울이지 않는’ 국가라고 서술했다. 정부 관리와 법 집행관이 인신매매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증거도 있었다. 인신매매 퇴치 활동은 2021년 쿠데타 이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2.63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광업, 야자수 및 고무 농장, 불법 사기 센터, 태국 북서부 과일 농장 및 공장, 태국 및 대만 어선 등에 팔려가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미얀마 국내와 해외, 특히 중국에서 성매매와 강제 결혼을 당한다. 2019년에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인신매매범들이 카친족 여성을 중국으로 유인하거나 억지로 보내 강제 결혼을 시키거나 성 노예로 만든다고 보고했다. 로힝야족 여성은 말레이시아로 인신매매되어 로힝야족 남성과 강제 결혼한다고 보고됐다. 외국인들은 미얀마로 인신매매되어 와족 지역과 샨주에 있는 스캠(scam) 조직의 사무실, 매춘 업소, 카지노에서 일하게 된다. 여성, 아동, 성소수자(LGBTQIA+), 소수민족, 국내실향민(IDP)은 특히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높다.

3.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 사유

인종/국적

3.1 미얀마에서 종족성 또는 민족성은 시민권과 기본권을 좌우하고 정치·무력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자 차별의 근원, 특히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의 근원이다. 2024년도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미얀마 인구의 구성비는 버마족(바마족) 68%, 산족 9%, 카렌족 7%, 라카인족 4%, 중국계 3%, 인도계 2%, 몬족 2%, '기타' 5%이다.

3.2 공공 기관은 자의적으로 국민의 인종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미얀마의 민족 다양성보다는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인종 분류를 반영한다. 미얀마에서 정체성은 민족성·종교·언어·지리적 위치 등의 요소를 통해 복잡하게 구성된다. 한 가족일지라도 인종 정체성은 각자 다를 수 있으며, 공식 지정된 인종이나 종교는 본인이 정체화한 인종/종교와 다를 수 있다.

3.3 「미얀마 시민권법(Citizenship Law, 1982)」은 민족을 기준으로 국민의 서열을 규정하는데, 2019년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국에서 차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법치가 약화된다”고 밝혔다.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면 ‘타잉인따(taingyintha)’, 즉 1823년 이전부터 미얀마에 통상 거주했다고 간주되는 민족 출신 양친에게서 태어나야 하며, 이들은 대체로 버마족, 중국 카친족, 까인족, 까야족, 몬족, 라카인족, 산족에 속한다. ‘완전시민권’은 타잉인따 혈통 덕분에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시민권자인 양친에게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여된다. ‘준(準)시민권’은 「연방시민권법(Union Citizenship Act, 1948)」에 따라 과거에 시민권을 신청했고 「미얀마 시민권법(Citizenship Act, 1982)」이 제정될 당시 신청이 계류 중이었던 사람에게 부여된다. 마지막 범주인 귀화시민은 1948년 독립 이전 미얀마에 거주했던 사람 및 이들의 후손 중 미얀마에서 출생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잉인따로 간주되지도 않고 1982년 이전 시민권 법률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한 적도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준시민과 귀화시민이라는] 범주를 가르는 핵심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부모가 1982년 법 제정 이전에 「연방시민권법(Union Citizenship Act, 1948)」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했는지 여부”라고 보고했다.

3.4 1990년에 미얀마 군사 정부, 일명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는 타잉인따 민족, 즉 정부가 영국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미얀마에 통상적으로 거주했다고 간주하는 ‘135개 국민 민족’의 목록을 발표했다. 135개 민족 집단은 버마족, 카친족, 까인족, 까야족, 몬족, 라카인족, 산족의 8대 ‘주요 국민 민족’으로 분류됐다. 로힝야족은 정부에게 타잉인따로 공식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 미얀마 정권도 이 민족 목록을 인정하면서 적은 수의 민족을 새로 추가했지만, 로힝야족은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

3.5 타잉인따로 간주되지 않는 집단이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 거주 사실 및 가계(家系)를 증명해야 하며, 수년간 걸리는 경우도 많다. 로힝야족, 중국계/인도계 주민 상당수, 그리고 힌두교도와 무슬림 같은 종교 소수자들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청소년이거나 성인일 때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시민권 심사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3.6 미얀마 「2008년 헌법」 제347조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누리도록 보장하지만, 많은 사람이 법률상에서,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한다. 완전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의사, 법률가 등 특정 직업군에서 배제된다. 정부 및 군대에서 근무하는 모든 비(非)버마족에게는 비공식 승진 제한이 적용되어 이들이 고위급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소수민족은 다수민족인 버마족에 비해 신분 등록 서류가 없는 미등록자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무국적’ 항목 참조). 소수민족 중에는 출신 주/지역에서 분쟁이 계속되면서 폭력과 실향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안보 상황](#)’ 항목도 참조).

3.7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인종 차별이 광범위하고 제도화되어 있고, 버마족 불교도는 다른 집단보다 우대받으며, 특히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버마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 우대받는다. 소위 ‘혼혈 인종’, 즉 남아시아계 또는 중국계에 속하거나 속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따로 줄을 서야 했고, 때로는 공무원이 민족 비하 발언을 하거나 공공 서비스 이용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인종에 근거한 괴롭힘과 차별을 가했다고 보고했다. 학교 교육과정에도 ‘혼혈’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시와 같은 인종차별적 내용이 때로 포함된다.

3.8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미얀마의 비버마(소수) 민족 구성원이 민족에 근거한 사회적·공적 차별을 받을 위험이 중간 정도라고 평가하며, 로힝야족 같은 집단은 더 높은 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한다(아래 개별 항목 참조). 친족, 카렌족, 까렌니족 등 소수민족은 대체로 무장 저항 운동과 실제로 연관이 있거나 연관이 있다고 여겨진다는 이유로 국가 폭력을 경험한다(‘[안보 상황](#)’ 항목과 ‘[실제 또는 전가된](#)’ 정치적 견해’ 항목도 참조).

친족

3.9 친족은 언어·문화가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대부분 친주, 사가잉 지역, 머궤 지역, 라카인주에 거주하지만 소규모로 전국 각지에 거주하기도 한다. 미얀마에는 약 50만 명의 친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양곤에 거주하는 친족은 최대 10만 명에 이르지만 가구 명부에 양곤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은 거의 없다(‘신분 증명 서류’ 항목 참조). 야쇼(Asho) 부족, 초(Cho) 부족, 쿠미(Khumi) 부족, 쿠키(Kuki) 부족, 라이미(Laimi) 부족, 루샤이(Lushai) 부족, 조미(Zomi) 부족 등 여러 친족 부족이 있다. 원래 이러한 하위 부족은 고유한 의복, 문신, 전통을 통해 식별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문화적 표식은 많이 줄어들었다. 대다수 친족은 기독교인이지만 일부는 불교나 애니미즘을 신봉한다. 소수는 유대인 혈통처럼 정체화한다.

3.10 현지 및 해외 언론과 인권 단체들은 강제 노동, 자의적 구금, 고문, 친족이 믿는 기독교 탄압 등 친족에 대한 미얀마 보안군의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기록해왔다. 친주 주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하는 등 2021년 쿠데타에 강력히 저항했다. 군부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맞서 수많은 친족 무장 단체가 수립됐고, 2025년 본 보고서 발행 시점에도 군부 정권과 이들 단체 간 분쟁은 진행 중이다(‘[안보 상황](#)’ 항목 참조).

3.11 2021년 쿠데타 이후 친주에서 무차별 공습, 방화 및 포격 공격, 강제 실종, 초법적 살인,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보고가 속출했다. 비정부기구(NGO)인 친인권기구(Chin Human Rights Organisation, CHRO)가 2022년 7월 추산한 바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250명이 넘는 친족 민간인이 국가행정위원회(SAC) 병력에게 살해됐고, 친주 전역에서 1,800채가 넘는 가옥이 파괴됐으며, 900명 넘는 친족이 정치 범죄로 체포됐고, 친주에서 교회 및 종교 건물 65개소가 파괴됐다(‘기독교인’ 항목도 참조).

3.12 2023년, 유엔은 6만 명 넘는 친족이 인도 접경 지대인 미조람주와 마니푸르주로 탈출했으며 국내실향민이 적어도 6만 명 이상 발생했다고 추정했다(인도에 있는 친족 난민의 상황에 대한 정보는 [호주 외교통상부\(DFAT\) 인도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참조](#)).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친족 상당수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도 탈출했다.

3.13 친주 안팎에 거주하는 친족은 신분 증명 서류를 취득할 때, 정부 기관에 취직하거나 승진하려 할 때를 비롯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겪었다. 또한 친족은 검문소에서 보안군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는데, 미얀마의 여타 비버마·비불교도 소수민족이 경험한 것과 유사하다. 현지 정보원이 2022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버마어를 잘 구사하는 친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3.14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친주, 사가잉 지역, 머궤 지역, 라카인주 등 분쟁이 활발한 지역에서 친족은 민족을 근거로, 그리고 무장 저항 단체와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거나 실제로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공적 차별과 국가 폭력을 겪을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미얀마의 다른 지역에서 친족은 다른 비버마족 민족과 유사한 정도로 사회적·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에 처한다. 기독교인 친족은 미얀마의 다른 기독교인과 유사한 위험에 처하며, 이러한 위험은 분쟁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카렌족

3.15 카렌족이라는 용어는 티베트-버마어를 사용하는 민족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총칭하며, 카렌족은 미얀마 인구의 약 7%(약 400만~500만 명)를 차지한다. 하위 집단으로는 스고(Sgaw) 부족, 포(Pwo) 부족, 브레(Bre) 부족, 파다웅(Padaung) 부족, 잉버(Yinbaw) 부족, 자옌(Zayein) 부족이 있다. 카렌족은 주로 미얀마 남동부 국경 지역, 특히 까인주, 떠닝다이(Tenasserim) 자치구, 동부 바고(Bago) 자치구, 몬주, 에아워디주(Irrawaddy)에 거주한다. 카렌족 대부분은 불교, 기독교 또는 전통 애니미즘 종교를 신봉하며, 소수이지만 무슬림도 있다.

3.16 카렌주의 북부와 남부 대부분은 카렌족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특히 카렌민족동맹/카렌민족해방군(KNU/KNLA)의 통제 하에 있다(‘무장 단체’ 항목 참조). 1984년부터 미얀마군, 카렌민족동맹/카렌민족해방군(KNU/KNLA), 기타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 분쟁이 계속되며 약 9만 명의 카렌족이 태국에 장기 보호를 요청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 태국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참조). 2021년 쿠데타 이후에는 폭력을 피해 미얀마 국내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대규모 이동이 추가로 발생했다(‘안보 상황’ 항목 참조). 2024년 7월 기준, 유엔난민기구(UNHCR)는 국내실향민(IDP)이 까인주에서 약 21만 명, 남동부 전역에서 89만 9,000명에 달한다고 기록했다.

3.17 미얀마 보안군이 카렌족에게 자행한 인권 침해는 오래 전부터 보고되었으며, 쿠데타 이후 상황은 악화했다. 인권 침해 사례로는 무차별 공습과 포격, 민간인의 재산 소각, 자의적 체포, 고문, 인도적 지원 박탈, 카렌족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2021년 이후 국가행정위원회(SAC) 항공기는 카렌족 영토를 수백 차례 공습해 민간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120명 이상을 살해했는데, 사망자 중 다수는 민간인이었다. 비정부기구(NGO)인 카렌인권단체(KHRG)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까인주에서 최소 45건의 민간인 불법 살해가 일어났다고 기록하며 이는 작전 지역의 카렌족 마을 주민에게 미얀마군 병사가 ‘발견 즉시 사격’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카렌인권단체(KHRG)는 카렌 지역에서 비국가 무장 단체가 불법 살해와 기타 학대 사건을 일으켰다고 기록했으나, 그 수는 훨씬 적다.

3.18 2021년 쿠데타(및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까인주에 사는 카렌족은 일반적으로 비정부기구(NGO)뿐만 아니라 카렌민족동맹(KNU)이 평행정부 구조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교육·사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서비스, 특히 학교 교육과 의료이 분쟁으로 인해 중단됐다. 진료소는 필수 장비와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학교에는 책과 연필 같은 기본 학용품이 부족하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여러 시민불복종운동(CDM) 참가자 및 그 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카렌민족동맹/카렌민족해방군(KNU/KNLA) 영토로 피신했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인원들이 유용한 기술을 가져온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인원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서비스·자원 공급도 한층 어려워졌다.

3.19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비버마족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카렌족도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장악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 증명 서류를 취득할 때, 정부 기관에 취직하거나 승진하려 할 때, 검문소에서 보안군의 검문을 통과하려 할 때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현지 정보원이 2022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버마어를 잘 구사하는 카렌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차별 경험 가능성이 낮다.

3.20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카인주를 포함한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카렌족이 민족을 근거로, 그리고 무장 저항 단체와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거나 실제로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폭력과 실향을 겪을 위험이 높으며, 비국가 무장 단체에게 폭력을 겪을 위험은 낮다고 평가한다. 미얀마의 다른 지역에서 카렌족은 다른 비버마족 민족과 유사한 정도로 사회적·공적 차별을 당할 위험에 처한다.

남아시아계 주민

3.21 미얀마에는 약 250만 명의 인도계 주민이 있으며, 조상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가 독립하기 전에 이주해 온 이들도 있다. 버마족은 이 집단들을 민족·종교 정체성과 관계없이 단일 집단으로 인식하곤 한다. 현지 정보원은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전체 인도계 미얀마인 중 절반 이상은 시민증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아시아계 주민은 피부색을 근거로, 그리고 대다수가 힌두교도임에도 이슬람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진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다.

3.22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남아시아계 주민은 흔히 인종차별적 멸칭으로 불렸고, 정부 기관에서 따로 줄을 서야 했으며, 때때로 공무원에게 학대와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여권에 인종이 '혼혈'로 기재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일부 남아시아계 주민은 공립 병원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2023년에 보고하기도 했다. 반면 몇몇 남아시아계 주민은 상당히 부유하며 군부 및 정권과 사업상 연결되어 있다.

3.23 「미얀마 시민법(Citizenship Law, 1982)」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남아시아계 주민, 특히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하고, 그로 인해 공공 서비스 이용과 토지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미등록자와 마찬가지로 남아시아계 주민은 국립 대학에 등록할 수는 있어도 졸업이 금지되는데, 현지 정보원은 학위 과정 이수 6~8개월 후에 뇌물을 주고 졸업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혔다. 신분증이 있는 경우, 남아시아계 주민은 힌두교도인데도 신분증에 '불교도'로 잘못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3.24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남아시아계 주민이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이고 폭력을 겪을 위험은 낮다고 평가한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민족을 근거로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서비스 접근이 거부되는 등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높다. 시민권이 있는 남아시아계 주민이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이다. 종교를 근거로 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는 '힌두교도' 항목과 '무슬림' 항목을 참조한다.

로힝야족

3.25 로힝야족은 대체로 수니파 무슬림인 민족으로, 방글라데시 근처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주에 전통적으로 거주한다. 로힝야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에서 쓰이는 벥골어 방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인도-아리아어이다. 로힝야족은 므라욱-우(Mrauk-U) 시대(1430~1784) 이래로 미얀마 북서부에 거주했던 무슬림 상인과 경호원의 후손임을 주장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비교적 근래에, 특히 영국 식민지 시기(1784~1948)에 방글라데시에서 이주해 왔다. 2017년 8월 이전 미얀마에는 약 120만 명의 로힝야족이 거주했으나, 군부의 탄압을 피해 약 7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

3.26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역대 정부는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 이주자'로 명시했고, 그들을 소외하고 권리를 박탈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많은 로힝야족이 이들을 버마 시민으로 인정하는 국민등록증(National Registration Card, NRC)을 소지했지만, 1989년 '시민권 전면 조사' 이후 신분증은 시민권확인증(Citizenship Scrutiny Card, CSC)으로 바뀌었고 로힝야족에게는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995년, 정부는 로힝야족에게 임시등록증(Temporary Registration Card, TRC, 일명 '백색 카드')을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2015년에 임시등록증(TRC)이 무효화되며 대다수 로힝야족이 미등록 상태이자 사실상 무국적자가 됐다([신분 증명 서류](#) 항목도 참조).

3.27 로힝야족은 시민권 취득에서 배제됨에 따라 미얀마에서 [의료 및 교육 접근, 고용 기회, 이동의 자유](#), 자녀 출산 시기와 자녀 수를 선택할 자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 공직 출마의 자유 등 기본권과 기본 서비스를 거부당한다. 로힝야족은 특히 「미얀마 시민권법(Citizenship Law, 1982)」과 「인종 및 종교 보호법(Race and Religion Protection Laws, 2015)」(‘종교’ 항목 참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들 법은 로힝야족을 시민권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차별의 표적으로 특정한다. 로힝야족은 미얀마가 독립한 이래 1977~1979년, 1991~1992년, 2012년, 2015년, 2016~18년에 거듭하여 학살, 성폭력, 마을 불태우기 등의 폭력과 실항으로 고통받았다. 2023년 11월 라카인주에서 군부와 여카잉군의 휴전이 깨진 이래로 갈수록 많은 로힝야족 민간인이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대규모 공격, 마을과 도시 거주지 소각, 대규모 실항이 보고된 바 있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로힝야족은 흔히 인종차별적 명칭으로 불리고 이슬람 신앙 관련 발언 등 혐오 발언에 시달린다.

3.28 2012년에 국가가 배후에 있는 폭력으로 인해 실항민이 된 이래, 2023년 현재 약 13만 명의 로힝야족이 라카인주 중부에 있는 ‘임시’ 수용소에 거주하고 있다. 현지 및 국제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수용소의 상황은 비참하고, 수용소 내 주거 시설은 부적절하고 환경도 갈수록 나빠지며, 거주민들은 제한된 외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 식량, 의료 서비스, 교육을 받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쿠데타로 인해 이러한 수용소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이 줄어들고 주요 인도적 지원 공여자들도 철수했지만, 몇몇 국제 비정부기구(INGO)는 2023년에도 현지 파트너를 통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했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상황에 대한 정보는 [호주 외교통상부\(DFAT\) 방글라데시 국가정황정보 보고서](#)를 참조할 것.

3.29 약 10만 명의 로힝야족이 라카인주 중부에서 보안군과 다른 민족 공동체에 둘러싸여 고립된 마을에 거주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 사는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도 특히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 그들은 도시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번거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시장, 학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라카인주 중부에서 로힝야족은 고용될 기회가 거의 없으며, 어부 등 노동자들은 근로 허가를 받기 위해 흔히 뇌물을 지불한다. 라카인주 북부에는 약 40만 명의 로힝야족이 거주하며, 이들은 인구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지역의 로힝야족은 다른 지주로 들어갈 수 없지만, 거주 중인 지구 내에서는 이동할 수 있으며 교육과 의료에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로힝야족과 라카인주의 기타 민족 집단 간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개선됐지만 여전히 악화하기 쉽다.

3.30 2024년 북부 라카인주에서 분쟁이 재발하면서 많은 로힝야족과 부디다웅과 마웅도(Maungdaw) 지구의 거주민들이 추가로 실항했다. 군부 정권과 반정권 무장 단체, 특히 여카잉군(AA)도 로힝야족을 군인과 노동자로 징집했다는 보고가 있다. 많은 로힝야족이 여전히 방화와 포격에 시달린다.

3.31 라카인주 전역에서 로힝야족은 범죄 조직이 일으키는 인신매매와 착취, 그리고 보안군과 다른 민족 집단이 가하는 폭력에 쉽게 피해를 입는다.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은 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검문소에서 빈번한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리고,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자의적 구금을 당하거나 벌금을 냈는데, 이들 중 다수가 신분 증명서가 없다. 2024년 4월, 현지 및 해외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군이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강제 징집했다. 2023년 기준으로, 보고에 따르면 라카인주 밖에 사는 몇몇 로힝야족은 소속이 ‘버마족 무슬림’ 또는 카만족(Kaman) (또 다른 무슬림 민족 집단)으로 기재된 신분 등록 문서를 취득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피부색과 종교 때문에 상당한 차별을 겪었다.

3.32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라카인주 로힝야족 여성이 젠더기반폭력(GBV), 조혼 및 강제 결혼, 인신매매 피해를 입을 위험은 증가했다. 2022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 보고서는 라카인주에서 부정적 사회 규범과 성 고정관념이 젠더기반폭력(GBV)을 촉진했다고 밝혔다(‘여성’ 항목도 참조).

3.33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미얀마 로힝야족이 민족과 이슬람 신앙을 근거로 기본권 박탈과 서비스 거부 등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라카인주 안에서 로힝야족이 다른 민족에게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이고 보안군 및 민족 민병대에게 폭력을 겪을 위험은 높다. 라카인주 밖에서 로힝야족이 공적·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비슷하지만 폭력을 겪을 위험은 더 낮다. 라카인주 밖에 사는 미등록 로힝야족은 학대와 착취를 겪을 위험이 높으며, ‘불법’ 이동했다는 이유로 당국의 체포와 구금 대상이 된다.

종교

3.34 미얀마 「2008년 헌법」 제34조는 모든 미얀마 시민에게 ‘양심의 자유와 공공 질서, 도덕, 건강에 따라 종교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종교 생활을 할 권리’를 부여한다. 헌법 제361조는 시민 대다수가 믿는 종교로서 ‘불교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 「2008년 헌법」 제362조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애니미즘을 ‘본 헌법이 발효된 일자에 연방에 존재하는 종교’로 인정한다. 공무원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제352조를 비롯해 「2008년 헌법」의 기타 조항들도 종교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현지 정보원은 많은 미얀마 사람이 종교를 근거로 법률상 차별 등의 차별을 겪었다고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혔다.

3.35 「인종 및 종교 보호법(Race and Religion Protection Laws, 2015)」으로 알려진 4개 법률은 종교간 결혼, 개종, 일부일처제, 인구 조절에 관한 법률이다. 이 4개 법률은 민족주의 불교 조직이자 일명 마바타(Ma Ba Tha)로 불리는 국적 및 종교 보호 위원회(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ity and Religion)가 처음 제안했다. 「불교 여성 특별 혼인법(Buddhist Women Special Marriage Law, 2015)」에서는 비불교도 남성과 불교도 여성의 혼인을 반드시 통지·등록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개종법(Religious Conversion Law, 2015)」에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개종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인구조절법(Population Control Law, 2015)」에서는 특별 구역을 지정해 인구 조절 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조치에는 지방 당국에 벌금과 체포를 통해 자녀 출산 간격을 최소 3년으로 강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일부일처제법(Monogamy Law, 2015)」은 이미 「형법(Penal Code, 1861)」에서 범죄화한 일부다처제를 금지한다. 2015년에 미얀마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 4개 법률이 로힝야족과 기타 무슬림을 겨냥하지만 기독교인과 힌두교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인종 및 종교 보호법(2015)」은 여전히 시행 중이지만,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얀마 정권은 전국적 무장 저항에 대처하느라 해당 법의 집행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

기독교인

3.36 기독교인은 미얀마 인구의 약 6%를 차지한다. 대다수가 침례교, 가톨릭, 성공회 교파에 속하며, 그 이외 소수 개신교 집단들이 있다. 친족, 카친족, 나가족은 대부분 기독교인이며 카렌족과 까렌니족에도 기독교인이 많다. 기독교 교회와 조직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영적·세속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시민사회’ 항목 참조).

3.37 기독교인의 신앙 행위가 법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정권의 정책과 행동이 신앙 행위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그러하다. 다른 소수집단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공공 부문에서 과소 대표되며, 보고에 따르면 보안군이나 정부 부처에서 고위직을 맡는 것이 금지됐다고 한다. 무슬림과 힌두교도처럼 기독교인도 인종 및 종교 보호법의 영향을 받지만(‘종교’ 항목 참조), 현지 정보원은 이 법이 적극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했다.

3.38 「조직등록법(Organisation Registration Law, 2022)」에 따르면 종교 단체가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인데,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을 실천하는 데 인도주의 활동이 필수라고 여긴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텔레그램(Telegram)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반기독교 자료가 유포됐고, 군부 정권 병력 및 지지자들은 저항군을 ‘기독교인 시민방위군(PDF)’이라고 부르는 등 기독교인을 ‘불충’한 집단으로 묘사했다.

3.39 와주(Wa State)에서 기독교인은 역사적으로 와연방연합군(UWSA)에게 박해를 당했는데(‘안보 상황’ 항목 참조), 와연방연합군은 ‘종교적 극단주의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 목사와 신도들을 구금하는 작전을 개시했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 이후로 와주에서 기독교인의 처지는 나아졌고, 2023년 12월부터는 대체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3.40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자선 활동을 통해 기독교인을 불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몇 차례 보고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현지 정보원은 강제 개종이 드물다고 보고했다. 2019년에 기독교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모닝스타 뉴스(Morning Star News)는 라카인주 지방 공무원 5명이 친족 기독교인 2명을 납치하고 불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3.41 보고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보안군은 기독교 교회를 의도적으로 폭격·포격·약탈·파손·소각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징발하기도 했다. 2024년에 해외 언론은 쿠데타 이후 적어도 67개의 기독교 교회가 파괴됐으며, 많은 경우 파괴가 의도적이었다고 보도했다. 2024년 1월, 사가잉 지역 카난(Kanan) 마을에서 예배 중에 정부군이 공습을 실시하여 17명이 사망했고 침례교 교회가 파손됐다. 2021년 5월, 까야주 로이꺼(Loikaw)의 가톨릭 교회가 군인들에게 포격당해 4명이 사망하고 최소 8명이 부상당했는데, 보고에 따르면 군인들은 교회 안에 피신한 민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2022년 4월에는 군인들이 만달레이 성심 대성당(Sacred Heart Cathedral)을 점령하고 대주교와 신자 수십 명을 인질로 잡았다.

3.42 2021년 쿠데타 이후 보안군은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을 겨냥해 자의적 구금, 비인도적 대우, 납치, 초법적 살해를 자행했다. 2023년 11월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적어도 기독교 목사 5명과 집사 3명이 국가행정위원회(SAC) 병력에게 살해됐다. 2023년 11월에는 정부군 군인들이 머궤의 소(Saw)에서 기독교 목사를 매복 공격해 살해했다. 2021년 3월에는 침례교 목사 4명과 신도 7명이 라쇼에서 체포되고 구금 중 구타당한 것으로 보고됐다. 2021년 9월에는 침례교 목사인 쿹 비악 흠(Cung Biak Hum)이 친주의 탄틀랑에서 화재를 진압하려다 총에 맞았다. 군인들은 목사를 살해한 후 손가락을 잘라내고 결혼반지를 훔쳐갔다.

3.43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미얀마에서 기독교인이 종교를 이유로 보안군의 괴롭힘과 물리적 공격 등 공적 차별과 폭력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 온라인 혐오 발언과 간헐적 강제 개종 시도 등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낮은 정도로 평가한다. 교회 지도자는 특히 분쟁 지역에서 보안군에게 폭력을 당할 위험이 더 높다.

힌두교도

3.44 힌두교도는 미얀마 인구의 약 0.5%를 차지한다. 2024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힌두교도는 거의 모든 지역에 거주하며 바고에 거주 중인 인구가 가장 많다. 양곤과 만달레이에도 상당히 큰 힌두교도 공동체가 있다.

3.45 다른 남아시아계 주민과 마찬가지로 힌두교도는 신분 증명 서류를 발급받거나 공공 의료를 비롯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경험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다수집단인 버마족 불교도는 힌두교도를 무슬림 및 로힝야족과 혼동하곤 한다. 힌두교도는 흔히 인종차별적 멸칭으로 불리며 정부 기관에서 따로 줄을 서야 한다. 힌두교도의 약 68%가 시민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신분 증명 서류’ 항목 참조).

3.46 미얀마에서 힌두교도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소수 종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예배 장소를 건립할 때 장벽에 부딪힌다. 힌두교도는 종교 축제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불교도도 종종 힌두교 성지를 순례하고 축제에 참석한다.

기독교인과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힌두교도도 인종 및 종교 보호법의 영향을 받지만(‘종교’ 항목 참조), 현지 정보원은 이 법률이 적극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했다.

3.47 힌두교도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폭력은 드물지만 발생한 바 있다. 2017년 8월, 라카인주 북부 마웅도에서는 53명에 달하는 힌두교도가 학살됐고 46명이 실종됐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조사 결과 아라칸 로힝야족 구원군(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 ARSA; ‘안보 상황’ 항목 참조)이 가해자라고 밝혔지만, 아라칸 로힝야족 구원군은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유엔 진실규명위원회(UN Fact-Finding Mission)에서도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본 보고서 발행일 기준, 1,000명 넘는 라카인 출신 힌두교도가 2017년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 실항민으로 살고 있다([호주 외교통상부\(DFAT\) 방글라데시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참조).

3.48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미얀마에서 힌두교도가 종교 및 로힝야족과 연관이 있다는 인식을 이유로 서비스 접근 제한과 혐오 발언 등 공적·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 폭력을 겪을 위험은 낮은 정도로 평가한다.

무슬림

3.49 카만족(Kaman), 뽀데족(Pantay), 빠슈족(Pashu), 로힝야족, 제버디족(Zerbadee) 등 서로 다른 무슬림 공동체가 미얀마 전역에 걸쳐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수니파다. 인구 조사 자료에는 무슬림 인구가 약 4%를 차지한다고 나타나지만, 로힝야족 무슬림은 사실상 인구 조사에서 배제되기에 이 수치는 이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 무슬림 대다수는 북부 라카인주에 거주하지만, 양곤, 예아워디(Ayeyarwady), 머레, 만달레이에도 무슬림 공동체가 있다.

3.50 미얀마에서 무슬림들은 차별을 겪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고 있다. 이전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에는 무슬림 장관이 없었고, 군부 정권의 국가행정위원회(SAC)에도 무슬림 위원이 없다. 대항 세력인 국가통합정부(NUG)에는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에 무슬림 위원이 1명 있으며(‘정치 체제’ 항목 참조), 로힝야족 무슬림이 국가통합정부(NUG)의 인권 차관으로 재직한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무슬림은 일반적으로 군인, 공무원, 공학자, 의료인을 비롯한 직군에서 배제되지만,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몇몇 무슬림이 교사로 채용됐다.

3.51 무슬림은 종교를 근거로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잦다. 시민권 증서가 없는 무슬림은 80%에 달하며,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더라도 취득하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신분 증명 서류’ 항목 참조). 이유는 다양한데, 무슬림인 신청자가 매우 많고 취득하기도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따잉인파 지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민 담당 부서가 무슬림을 다수 민족인 버마족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일부 무슬림은 시민증을 신청할 때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표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속을 ‘외국’ 민족, 예컨대 벵골인으로 선택해야 했다.

3.52 현지 무슬림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군부 정권이 무장 저항을 탄압하는 데 집중함에 따라 미얀마의 반무슬림 정서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감소했다. 현지 정보원은 많은 버마족이 군부 정권의 억압을 직접 경험한 이후 무슬림들을 더 공감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2023년에 이슬람 혐오 자료는 소셜 미디어, 국가 기관, 뉴스 웹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유포됐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무슬림은 공공장소 등지에서 인종차별적 멸칭과 혐오 발언을 흔하게 듣는다. 무슬림은 일반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지만, 1962년 이래 미얀마에서는 새로운 모스크 설립이 승인된 적 없고, 거주 지역에 모스크가 부족하다 보니 무슬림은 어쩔 수 없이 개인 주택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3.53 2021년 쿠데타 이전에는 마바타(Ma Ba Tha)와 969 운동(969 Movement) 같은 극단적 민족주의 불교 운동이 미얀마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무슬림 혐오를 조장했다.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이들 단체의 영향력은 약해졌지만, 극단적 민족주의 불교와 군부 정권 간에는 여전히 강력한 연계가 있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군부의 군인들은 반이슬람 사상을 주입받고 군부는 반무슬림 허위 정보 유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친군부 이용자들이 시민방위군(PDF)과 정치적 대항 세력이 해외 이슬람 테러 집단과 연결돼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바 있다.

3.54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라카인주에서 무슬림은 민족을 불문하고 종교에 근거해, 또한 로힝야족(특정한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함)과 연관이 있다는 인식에 근거해 혐오 발언 및 서비스 접근 불공평 등 공적·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높고 폭력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라고 평가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라카인주 이외 지역의 무슬림이 종교를 근거로 혐오 발언 및 서비스 접근 불공평 등 공적·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 폭력을 겪을 위험은 낮은 정도로 평가한다.

(실제 또는 전가된) 정치적 견해

정치적 표현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3.55 「2008년 헌법」은 미얀마의 정치 체제가 ‘진정하고 엄격한 다당제 민주 체제’라고 기술한다. 헌법 제404~406조에 따라 정당은 자유롭게 창당하고 당을 조직할 권리와 선거에 참여하고 경쟁할 권리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도 제354조에 따라 “연방의 안보, 법 질서 확립,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 또는 공공 질서와 도덕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된다. 현실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정부에 의해 일상적으로 침해된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사실상 군사 독재 국가가 됐다.

3.56 군부 정권은 형사 고발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반대자를 탄압한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정치범 대다수는 「형법(Penal Code, 1861)」 제505A조, 일명 ‘선동법’에 따라 기소됐는데, 선동법은 반란을 선동하거나 ‘공포를 야기’할 의도가 있는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여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그 외에도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법률로는 「형법(1861)」 제121조, 제122조, 제124조가 있는데, ‘중대반역죄’에 관한 상기 조항에 따르면 죄인은 최대 20년의 징역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3.57 군부 정권은 「형법(1861)」 제505A조를 계속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한편, 대테러법(2014)도 갈수록 자주 활용하는데, 대테러법(2014)은 2021년 개정되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도 3년에서 종신형 또는 사형에 이르도록 더 가혹하게 규정되었다. 2023년에 ‘정치 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약 60%가 대테러법(2014)에 따라 기소됐다. 대테러법(2014)의 활용 빈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해당 법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시민방위군(PDF)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거나 시민방위군(PDF) 구성원이라고 알려진 가족의 소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몇몇 사람은 「무기법(Arms Act, 2023)」 및 「폭발물법(Explosives Act, 1884)」에 따라 무기나 폭탄 제조 물질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법률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법률에 따라 기소된 사람 중 다수는 무장 저항 세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3.58 군부 정권은 「시민의 사생활 및 안전 보호법(Law Protecting the Privacy and Security of Citizens, 2021)」의 제5조, 제7조, 제8조의 적용을 유보하여 자의적 구금과 영장 없는 감시·수색·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했다. 또한 「형법(1861)」 제124조와 제505조를 개정해 ‘공포 야기’ 또는 ‘허위 뉴스 유포’처럼 표현이 애매모호한 범죄를 포함시켰고, 이러한 범죄를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형사소송법(Code of Criminal Procedure, 1898)」을 개정해 상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석이 불가하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반정부 세력으로 의심되는 자 식별

3.59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람들은 극히 사소한 이유로도 정부의 의심을 받을 수 있었고, 당국에서는 군부 정권에 적극 반대하는 사람과 단지 정권에 불만을 표현하거나 대항 세력을 지지하는 데 불과한 사람을 거의 구별하지 않았다.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국은 무장 저항 세력에 재정지원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특히 민감했다고 한다.

청년, 소수민족, 의료 인력 등의 집단이 특히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전한 신빙성 있는 보고에 따르면, 당국은 가족을 인질로 억류하여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항복을 강요하기도 했다.

3.60 당국은 검문소에서 전화기를 무작위로 검사하고 반정부 인사를 색출하기 위해 간혹 가가호호 수색을 실시한다. 그러나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당국은 대항 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 정보원 네트워크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에 갈수록 더 많이 의존한다. 해당 정보원에 따르면 경찰과 군은 정치 범죄로 수배된 사람의 명단을 사진과 함께 전화기에 저장해 검문소를 통과하는 사람들과 대조 확인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최대 5,300호주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주고 명단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긴 했지만, 유명한 반정부 인사나 무장 저항세력과 연관됐다고 의심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3.61 당국은 소셜 미디어에 정권 반대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을 추적하고 체포한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총 1,306명이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 2024년 5월에 군부 정권은 가상사설망(VPN) 소프트웨어 금지 조치를 강화했는데, 가상사설망(VPN)은 페이스북, 위키피디아, 구글 지도 등 사용이 제한된 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 미얀마에서 널리 사용된다. 경찰은 무작위로 전화기를 검사하여 누구든 가상사설망(VPN)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한다.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정권의 처우

3.62 고위급 정치 지도자부터 일시적으로 거리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자의적 구금, 고문, 성폭력, 신상 털기(개인 정보 무단 공개), 온라인 괴롭힘, 강제 실종을 비롯해 각종 학대를 당했다. 2022년에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수 아웅 산 수 치는 여러 혐의로 징역 33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녀의 지지자들은 이 같은 선고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웅 산 수 치의 형량은 27년으로 감형됐고, 그녀는 2025년 본 보고서 발행 시점에도 가택연금 상태였다. 현지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정치 범죄 때문에 구금된 사람은 2만 7,000명이 넘는다. 체포된 사람 중 일부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 7월부터 군부 정권은 이들의 사형 집행을 시작했다(‘사형’ 항목 참조).

3.63 정치 범죄 재판은 대체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교도소 내 특별 법정에서 열린다. 이러한 비공개 재판은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수감자가 법률 자문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고 변호를 받을 기회도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유죄 판결률은 거의 100%에 달했고 군부 정권은 판사에게 압력을 가해 모든 사건에서 최대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테러, 반역, 폭발물 범죄를 포함해 23가지에 이르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군사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이러한 재판은 약식으로 이뤄지며 사형을 포함해 매우 가혹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법률 체제’ 항목도 참조).

3.64 정치범이 구금 중 고문당하거나 학대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보고가 속출했는데, 여기에는 AP통신(Associated Press),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의 보고가 포함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고문은 여전히 흔하며 특히 군 심문 센터에서 자주 벌어진다. 또한 2023년에 현지 정보원은 구금자 강제 실종과 초법적 살인이 보고됐다고 기술했는데, 이후 당국은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나 탈출 시도가 실패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은폐했다.

3.65 현지 정보원이 2022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치범이 일부 석방되기는 했지만 정확히 몇 명이 석방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보고에 따르면 석방된 수감자는 사면받은 사람과 필요에 따라 특별 석방된 사람들로 나뉜다. 구금된 사람은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 사면을 요청할 수 있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영향력 있는 군 인사와 인맥이 있으면서도 전과가 없거나 민주화 단체와 무관한 수감자들이 사면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구금자가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면 재체포된다. 서약서상 조건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시위나 정치 운동 참여 금지, 소셜 미디어 게시 금지, ‘평화와 안정 파괴’ 금지 조항이 들어간다.

3.66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군부 정권에 반대하거나 반대한다고 간주되는 사람은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고문, 구타, 초법적 살인 또는 사형 집행을 비롯해 공적 차별과 폭력을 겪을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의 가족 역시 반대자가 자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납치되고 인질로 억류되는 등 공적 차별과 폭력을 겪을 위험이 높다.

정치인 및 정당 당원

3.67 정당 활동은 미얀마에서 여전히 합법이지만, 2021년 쿠데타 이후 정당 모임이나 조직 활동은 크게 위축됐고, 2025년 본 보고서 발행 시점 기준으로 등록된 정당 대다수는 정권과 연계되어 있다. 2021년 쿠데타에 반대하는 정당, 특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국외로 도피해야 했다. 일반 당원은 자의적 체포, 고문 또는 강제 실종을 당했지만,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보다는 정권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

3.68 군부 정권은 2023년에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포함한 40개 정당이 새로운 선거법에 의거해 등록하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이 정당들을 해산했다. 2021년에 국가행정위원회(SAC)는 국가통합정부(NUG), 국민통합자문위원회(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 시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s),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고,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이들을 '섬멸'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일부 군소 정당은 군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3.69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포함한 야당의 당원은 당적을 근거로 공적 폭력과 자의적 구금을 겪을 위험이 중간 정도라고 평가한다. 당 지도자, 국가통합정부(NUG) 구성원, 국가통합자문위원회(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 위원은 공적 폭력과 자의적 구금을 겪을 위험이 높다.

시민불복종운동

3.70 2021년 쿠데타 직후, 파상 파업·시위·직장 폐쇄 등 광범위한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전국에서 발생했다. 처음에는 의사와 의료 인력이 주도했던 운동은 교사, 대학 강사, 공무원, 공공 은행 직원, 철도 노동자 등으로 확산했다. 시민불복종운동(CDM) 전성기에는 정부 직원 42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교사 약 13만 명과 의료 인력 4만 5,000명을 비롯해 약 20만 명이 여전히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하고 있다.

3.71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은 시민불복종운동(CDM) 참여자들에게 복직하지 않으면 '태만' 또는 '무단 결근'을 이유로 「공무원법(Civil Services Personnel Law, 2013)」에 따라 해고 또는 정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 노동자 약 1,000명을 비롯한 시민불복종운동(CDM) 참여자 일부는 공공 주택에서 퇴거당했다. 파업을 지속한 시민불복종운동(CDM) 참여자들은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악화시키려는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군부 어용 언론에 신상이 공개됐다. 이후 수백 명이 「형법(1861)」 제505A조에 따라 체포되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의 인원들도 보안군의 손에 구타, 고문 또는 살해됐다.

3.72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국은 시민불복종운동(CDM) 참가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텔레그램(Telegram) 같은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명단을 유포했다. 출국하는 사람들은 이 명단과 일치하는지 검사를 받으며 때로 구금되기도 한다('출입국 절차' 항목 참조).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최대 5,300호주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주고 명단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긴 했지만, 유명한 반정부 인사나 무장 세력과 연관됐다고 의심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시민불복종운동(CDM) 참여자 다수가 인접 국가, 농촌 지역, 또는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장악한 지역으로 숨거나 도피했다. 취직하거나 적은 생활 수당을 받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3.73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시민불복종운동(CDM) 참가자가 실직, 재산 압류, 위협, 자의적 체포 등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시민불복종운동(CDM) 참가자는 초법적 살인, 고문, 구금 중 학대 등 폭력을 겪을 위험이 높다. 시민불복종운동(CDM) 참가자의 가족은 공적 차별과 폭력을 겪을 위험이 비슷하게 높다.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는 공무원과 다른 사람들이 겪는 위험에 관해서는 ‘부역자와 정보원(및 부역자 또는 정보원으로 여겨지는 자)’ 항목을 참조한다.

탈주자와 탈영병

3.74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약 1만 4,000명의 경찰과 군인이 미얀마 보안군에서 탈주하거나 탈영했다. 탈주자와 탈영병은 2021년 쿠데타를 반대하거나 비무장 민간인 살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여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탈주자의 경우 일부는 무장 대항 단체나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에 합류했고, 일부 탈영병은 당국을 피해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장악한 지역이나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이들 대부분은 사병과 하급 장교 출신이지만, 중령을 포함해 고위 장교들도 탈주한 바 있다.

3.75 인민의 포옹(People's Embrace), 인민의 군인(People's Soldiers), 인민의 목표(People's Goal)를 포함해 탈주/탈영을 돕는 다수의 조직이 있다. 이들 조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탈주자/탈영병을 격려하고 신원을 조사하며, 그들이 복무지를 이탈해 반군 통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다. 탈주자/탈영병이 안전한 지역에 도착하면 조직은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후 일부 탈영병은 인접 국가나 해외로 이동하기도 한다. 2022년 3월, 호주 언론은 몇몇 전직 미얀마군 병사가 호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미얀마 언론도 이를 보도했다.

3.76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군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군인과 군인 가족은 흔히 군 기지에 거주하며 기지에서 이들의 생활과 재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탈영병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탈영병을 체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체포될 경우 장교는 투옥될 가능성이 높고, 사병과 경찰은 총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탈영병과 탈주자의 가족은 때로 보복을 당하거나 인질로서 구금될 위험에 처한다.

3.77 2022년 3월, 온라인 신문인 프런티어 미얀마(Frontier Myanmar)는 어느 텔레그램 채널이 정권을 비판하는 ‘수박’ 군인(녹색 군복을 입고 ‘붉은’ 혁명에 동조한다는 뜻)과 경찰을 암살하는 대가로 380~530호주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체제에 대항하는 군인과 경찰은 신상 털기와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3.78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탈주자와 탈영병이 체포 등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높고 온라인 괴롭힘과 신상 털기 등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도 높다고 평가한다. 불법 살해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군부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초법적 살인과 처형 등 공적 폭력을 겪을 위험도 높다. 탈주자/탈영병의 가족이 처하는 위험도 비슷하게 높다.

징병과 강제 징집

3.79 2024년 2월 10일, 군부 정권은 2010년 테인 세인(Thein Sein) 군사 정부 하에서 통과됐지만 집행되지 않았던 「국민군복무법(People's Military Service Law, 2010)」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 따라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은 2년간 군대에 징집될 수 있다. 의사와 엔지니어처럼 ‘전문가’로 분류되는 18~45세 남성과 18~35세 여성은 3년간 징집될 수 있다. 기혼 여성과 자녀를 둔 여성, 성직자, 장애인, 의학적으로 부적합한 사람, 중앙징병위원회에 의해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복무가 면제된다.

2025년 1월 23일, 군부 정권은 「인민군복무법」 시행을 지원하는 시행령, 즉 국가복무규칙을 도입했다. 주목할 점이 있는데, 국가복무규칙은 징집 명령을 받았거나 면제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허가 없이 해외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징병 등록을 하라고 소환된 사람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가복무규칙에서는 당국이 부재자의 가족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80 2024년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약 1,400만 명이 군복무 대상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에 따르면 군 발표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태국으로 도피했다고 한다. 병역 기피는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3.81 2024년 4월, AP통신(Associated Press)은 군부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강제 징집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국가통합정부(NUG)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해 강제 징집이 로힝야족과 대부분 라카인족으로 구성된 여카잉군(AA) 간 민족적 증오를 선동하려는 시도라고 기술했다.

3.82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인민군복무법(2010)」이 집행되기 전에도 군부 정권은 남녀 청년을 비전투원 및 전투원(남성 한정)으로 강제 징집했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검문소에서 체포된 청년들이 15만 짝(110호주달러)을 뇌물로 지불하거나 입대하는 것 중 선택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3.83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군은 형량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일반 범죄자나 수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또한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2024년 라카인에서 군부 정권이 미성년자를 징집했다는 비공식 보고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2025년 본 보고서 발행 시점에서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이러한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으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강제 징집된 군인은 생존율이 낮았으며 흔히 전투 최전선에서 '포탄 받이'로 이용당했다.

3.84 타양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연합군(MNDAA), 여카잉군(AA)을 포함한 소수민족 무장단체(EAO)도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강제 징집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는 북부 산주에서 미얀마민족민주연합군(MNDAA)이 강제 징집을 실시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24년 2월 타양족해방군(TNLA)은 16~35세의 모든 타양족 남성을 징병한다고 발표했다. 많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남녀 모두를 전투원으로 모집하며,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타양족해방군(TNLA)과 미얀마민족민주연합군(MNDAA)을 포함한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미성년자를 징집하는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

3.85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군부 세력이나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의 강제 징집 대상자가 실제 징집될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징집된 이들은 전투에 배치될 위험이 높다.

부역자와 정보원(실제 해당자 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자)

3.86 시민방위군(PDF) 등은 군부 정권에 부역하거나 정권의 정보원이라고 인식되는 민간인을 노리고 폭탄 공격, 방화, 총격을 가한다. 특히 구(區) 동장(ward administrator)은 정부 소속의 하급 민간 공무원으로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색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표적이 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전국에서 127명 넘는 지방 행정관이 살해됐다. 그로 인해 많은 구 행정관이 사임했다. 2024년 2월 징병제 시행 이후에는 징병에 참여하는 정권 산하 지방 행정관들이 표적이 됐다. 본 보고서 발행 시점 기준, 보고에 따르면, 80명 이상이 암살됐다.

3.87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원하지 않는 정부 직원들은 반정부 단체로부터 괴롭힘과 위협을 당했다. 심지어 강압으로 인해 근무를 계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1월, 국가통합정부(NUG)는 자신들이 집권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공무원을 강등, 해고, 여행 금지, 블랙리스트 등재 등의 방식으로 처벌하자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가 발표되자 국내에 논란이 일었는데, 군부의 전략을 똑같이 행하는 꼴이라는 것도 논란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였다.

3.88 반정부 집단은 군부와 거래를 했거나 거래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주와 군부가 지원하는 연방단결발전당(USDP) 당원을 겨냥한다. 정권 지지자의 가족들도 공격을 받아 살해된 바 있으며, 피살자 중에는 12세 어린이 등 아동도 있다. 또한 반정부 단체는 소위 부역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적 처벌'을 가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처벌'의 방식이 온라인 괴롭힘, 신상 털기, 가짜 포르노그래피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3.89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사업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것과 시민방위군(PDF)의 보복을 피하는 것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권에 부역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과 그 가족이 무장 대항 단체에게 위협받거나 살해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국가통합정부(NUG)는 정권에 맞서는 시민방위군(PDF)을 대상으로 행동 강령을 발표해 불법 살해 및 기타 인권 침해 위험을 줄이고자 했으나, 각 시민방위군 집단이 행동 강령을 얼마나 잘 집행하거나 준수하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3.90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정권 부역자/정보원으로 여겨지는 사람과 그 가족이 '사회적 처벌'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 살해 위험 및 초법적 살해 등 폭력을 당할 위험도 중간 정도라고 평가한다. 구(ward) 행정관은 사회적 차별과 폭력을 겪을 위험이 높다.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인권 옹호자

3.91 미얀마의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sation, CSO)와 비정부기구(NGO)는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한다. 시민사회단체(CSO)는 「결사등록법(Association Registration Law, 2014)」 대신 제정된 「조직등록법(Organisation Registration Law, 2022)」에 따라 관리된다. 새로 제정된 조직등록법에서는 보고 및 규정 준수 요건이 늘어났고, 모든 비정부기구(NGO)가 정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한다. 또한 비정부기구(NGO)가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고, 국제 비정부기구(INGO)는 40%가 미얀마 국적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며, 모든 비정부기구(NGO)가 종교, 정치 또는 경제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3.92 미얀마에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CSO)와 국제 비정부기구(INGO)는 다양한 전략을 채택해 이러한 제약에 대처한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몇몇 비정부기구(NGO)는 시위 운동과 연대하고 시위에 참여했으며 시민불복종운동(CDM)을 지원했다. 일부는 정권의 감시를 피해 '물밑'에서 활동하고자 했고, 일부는 활동을 중단하거나 국외로 도피했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부 비정부기구(NGO)는 법적 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군부 정권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정부에 등록하지 않는 쪽을 선호한다.

3.93 2021년 쿠데타 이후 당국은 수많은 비정부기구(NGO)의 사무실을 급습해 컴퓨터·문서·재무 기록을 압수했고, 직원까지 체포한 사례도 있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군부 정권은 비정부기구(NGO)를 계속 면밀히 감시하면서 비정부기구(NGO)가 지역 당국에 자금 출처 및 재무 관련 세부 사항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불시 단속은 예전만큼 흔하지는 않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어난다. 2023년 말 카친주에서 저명한 현지 비정부기구(NGO)가 불시 단속을 당했는데, 당국은 서류를 압수하고 직원들에게 활동에 관해 질문했다. 2025년 본 보고서 발행 시점 기준, 인권, 평화구축, 여성 인권을 비롯해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 종사하는 비정부기구(NGO)는 특히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3.94 2021년 쿠데타 이후 인권 옹호자들은 정권으로부터 괴롭힘과 자의적 구금과 초법적 살해를 당했다. 2021년 3월, 시민사회단체인 정의를 위한 여성들(Women for Justice)의 이사 아 쿠(Ah Khu)는 사가잉에서 시위 중 군부 병력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2021년 4월, 정의를 위한 여성들(Women for Justice)의 공동 창립자이자 미얀마 여성연맹(Women's League)의 핵심 회원인 틴 틴 아웅(Thin Thin Aung)이 양곤에서 체포됐다. 2022년 1월, 친인권기구(Chin Human Rights Organisation) 회원인 푸 투이 딘(Pu Tui Dim)이 친주 북서부에서 9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원 미상의 습격자들에게 살해됐다. 2022년 7월, 군부는 저명한 민주화 운동가 2명을 포함해 반쿠데타 활동에 참여한 남성 4명을 처형했다('사형' 항목도 참조).

3.95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권이 '민감'하다고 여기는 분야가 아닌 분야에 종사하는 인도주의·개발협력 서비스 제공자는 정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그럼에도 몇몇 인도주의 활동가가 보안군에게 살해된 바 있다. 2021년 12월 까야주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현지 직원 2명이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져 살해됐는데, 당시 미얀마군 병사들은 이들을 포함해 민간인 35명을 학살했다. 2025년 본 보고서 발간 당시까지 인도주의 활동가의 추가 피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3.96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현지 시민사회단체(CSO), 비정부기구(NGO), 국제 비정부기구(INGO) 직원, 인권 옹호자, 시민사회 행위자가 자의적 구금, 괴롭힘, 초법적 살해를 포함한 공적 차별과 폭력을 겪을 위험이 중간 정도라고 평가한다. 인권, 평화구축, 여성 인권을 비롯해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나 민감 분야로 간주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높은 위험에 처한다.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사회 인사들 또한 야권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위험에 처해있다.

언론인 및 언론

3.97 「2008년 헌법」 제8장 제354조(a)에 따라 미얀마 시민에게는 '연방 안보, 법과 질서의 일상화,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 또는 공공 질서와 도덕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출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얀마에서 언론의 자유는 2021년 쿠데타 이전부터 제한됐고 쿠데타 이후 몇 년에 걸쳐 심각하게 악화했다.

3.98 미얀마는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17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쿠데타 이전 순위인 140위에서 31단계 하락한 것이다.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간하는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 따르면, 군부 정권은 2022년 2월 이후 150명 이상의 언론 종사자를 투옥했고 언론인 7명을 즉각 살해했다.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언론인 한 명이 2022년 군의 급습을 피해 국내실향민(IDP) 수용소로 탈출했다가 해당 수용소가 포격 당하는 과정에서 살해됐다.

3.99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은 언론 매체를 폐쇄하고 편집실을 급습했으며 언론인을 체포했다. 2021년 3월 8일,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는 미얀마나우, 버마의 민주적 목소리(Democratic Voice of Burma), 미지마(Mizzima), 킷 톳 미디어(Khit Thit Media) 등 현지 언론 매체의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현지의 여러 라디오 방송사 및 기타 매체의 등록도 취소했다. 군인과 경찰은 2021년 반쿠데타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을 구타하고 체포했으며, 언론인이 구금 중 고문당해 장기적인 신체적·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신빙성 있는 보고도 있다. 그로 인해 언론인 수백 명이 국외로 도피했다. 미얀마나우, 에야워디 신문(The Irrawaddy), 미지마(Mizzima) 같은 언론 매체는 현재 해외에서 운영되며, 신변이 위협받을 높은 가능성을 무릅쓰고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정보원의 도움을 받곤 한다. 반체제 언론의 수입원이 거의 고갈됐기 때문에, 이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망명 언론인'은 흔히 기부와 가족의 지원에 의지해 활동을 계속한다. 합법적인 취업 자격이 없이 태국에서 일하는 망명 언론인은 불법 이민자라는 이유로 체포되고 강제추방될 위험에 처해 있다.

3.100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군부 정권은 언론인, 블로거, 일반 시민이 정부에 반대하는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리거나 이 같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알아내려고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한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온라인에서 정권을 비판하면 505A 및 「반테러법(Counter-Terrorism Law, 2014)」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됐다. 다른 형태의 정치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표현의 경우에도 사람들은 극히 사소한 이유로도 정부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소한 반대 행위조차도 심각한 처벌을 받았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는 유명인과 언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사가잉 공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페이스북 프로필을 검은색으로 바꾼 후 체포됐다.

3.101 정보원들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친정권 및 반정권 단체 양쪽의 시선을 피해 자체 검열을 하며,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 자가검열을 하고 보안군이나 군부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한, 국내에서 친군부 매체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민감하지 않은 주제를 대체로 보도할 수 있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독립 언론인은 때로 반정권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하고, 기사에서 반정권 활동에 관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인지한 범위 내에서는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자기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려고 폭력을 사용한 바는 없다.

3.102 군부 정권이 2025년 1월 새로 공표한 사이버보안법은 정권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 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 정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부적절한 정보'를 전자 매체로 배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3.103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미얀마의 독립 언론인이 검열과 괴롭힘 등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특히 보안군에 대한 비판처럼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인이 자의적 구금을 겪을 위험은 높고 폭력을 당할 위험은 중간 정도이다. 군부 정권을 비판하거나 대항 세력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이 같은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괴롭힘 및 자의적 체포 등 공적 차별을 당할 위험은 중간 정도이며, 폭력을 당할 위험도 중간 정도이다. 당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면밀히 감시하며, 온라인에 사소하게라도 비판 글을 올리면 법적 문제나 괴롭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관심 집단

여성

3.104 「2008년 헌법」 제348조는 성별을 근거로 국가 미얀마 시민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49~351조는 남성과 동일 노동을 하는 여성에게 동일 임금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고 산모와 임신부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제352조는 공공 서비스에서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본 조항의 어떤 내용도 남성에게만 적합한 직위에 남성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한다. 실제로 미얀마에는 그 외 여성을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거의 없으며, 현존하는 장치조차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3.105 부부간 강간을 불법화하는 법률은 없으며, 2012년부터 논의됐던 젠더기반폭력(GBV) 방지 법률 초안은 2021년 쿠데타 이후로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성관계 동의 연령은 14세이며, 「형법(1861)」 제375조(4)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소녀와 성관계를 한 남성은 강간죄에 해당한다. 「아동권리법(Child Rights Law, 2019)」에서는 아동 조혼을 불법으로 규정함에도 조혼은 미얀마에서 여전히 일어난다(‘아동’ 항목 참조).

3.106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여성은 성폭행, 이혼, 상속과 같은 문제에서 관습법으로 차별을 받는다(‘법률 체제’ 항목 참조). 「친특별자치구법(Chin Special Division Act, 1948)」에 따라, 이혼한 여성은 흔히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기고 결혼 이후 형성한 공동 재산에 접근을 거부당한다. 친주에서 강간은 보통 관습법에 따라 처리되며, 가해자들은 사과하고 7.5 호주달러 정도의 적은 벌금을 지불하여 처벌을 모면한다. 유사한 법률과 관행이 카친주와 라카인주에도 존재한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라카인주에서 미성년 소녀를 강간한 남성들이 피해 소녀와 결혼하여 혐의를 피한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

젠더기반폭력

3.107 2015~16년 미얀마 인구 및 보건 조사(Myanmar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에 따르면, 미얀마의 49세 미만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의 젠더기반폭력(GBV)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며,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증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쿠데타 이후 젠더기반폭력(GBV)의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 제한, 여성의 경제적 기회 감소, 남성 실업 증가, 보안군의 안보 작전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3.108 젠더기반폭력(GBV) 생존자는 관련 법률 부재, 정부의 무관심과 역량 부족, 피해자를 낙인찍고 무력하게 만드는 문화적 태도 등으로 인해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 2021년 쿠데타 이전에도 여성들은 낙인이 두렵고 국가의 보호 체계를 신뢰하지 못해서 젠더기반폭력(GBV)이나 강간을 대체로 신고하지 않았다. 2015~16년 미얀마 인구 및 보건 조사(Myanmar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는 신체적 폭력 또는 성폭력을 경험한 15~19세 소녀의 90% 이상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 정보원은 2021년 쿠데타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젠더기반폭력(GBV)을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않으며, 설사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했다.

3.109 쉼터, 의료 및 법률 지원 같은 젠더기반폭력(GBV)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 비정부기구(NGO)가 국외로 도피하거나 지하로 들어갔고 이러한 기관들이 받는 자금 지원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미얀마 여성연맹(Women's League) 같은 조직은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계속 이동식 쉼터를 운영하지만, 쉼터를 운영할 만한 장소는 제한적이고 여성들은 정권의 조사를 피해 여러 쉼터를 전전해야 한다. 2021년 쿠데타 이전에는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가 젠더기반폭력(GBV)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여성들은 군부 정권과 연관된 부서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한다. 카렌민족동맹(KNU)과 카렌니독립기구(Karenni Independence Organisation, KIO)를 비롯한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는 젠더기반폭력(GBV) 피해자 서비스 등 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들이 장악한 모든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110 미얀마군은 오래 전부터 젠더기반폭력(GBV)을 자행하고 강간을 전쟁 무기로 이용했다고 지탄을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17년 라카인주에서 군부 병사들이 로힝야족에게 강간을 '수십 건, 때로는 수백 건' 저질렀다고 보고했는데, 실제 수치는 아마 훨씬 더 높을 것이다. 2021년에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를 '무력 분쟁 중 유형화된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자행하거나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신빙성 있는 혐의를 받는' 주체의 목록에 올렸다. 현지 정보원은 군부 병사들이 분쟁 지역에서 처벌받지 않고 계속 강간을 저질렀다고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한 비정부기구(NGO)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사가잉에서 군부 세력이 강간을 20건 저질렀다고 기록했다.

3.111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와 시민방위군(PDF)을 포함한 저항 세력은 부역자와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및 여성 신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22년 8월, 현지 언론은 15~20세인 여성과 소녀 4명이 군의 급습 이후 버려졌던 마을에서 발견된 후 국가통합정부(NUG) 소속 민병대원들에게 강간·살해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국가통합정부(NUG)에 의해 잠시 구금됐다가 석방됐다. 국가통합정부(NUG)는 시민방위군(PDF)의 성폭력 및 기타 인권 유린을 금지하는 행동 강령을 발표했지만,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금지령은 때로 무시됐다고 한다.

3.112 2021년 쿠데타 이후 정권에 반대한 혐의로 보안군에 구금된 여성들은 성적 위협과 성적 괴롭힘을 당했으며 일부는 성폭행, 강간, 고문을 당했다는 보고가 속출했다.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낙인을 피해, 그리고 스스로 트라우마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특히 강간을 축소해서 보고하곤 한다. 해당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여성 정치범은 군 심문 센터에 억류되어 있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특히 성폭행에 취약했다. 구금 중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그 결과 장기간 신체적·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3.113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미얀마에서 여성이 젠더기반폭력(GBV)으로부터 적절한 국가적·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도 중간 정도라고 평가한다. 여성 정치범이 성적 괴롭힘을 겪을 위험은 높고 성폭력 및 강간을 당할 위험은 중간 정도이다. 분쟁 지역에서 여성이 보안군이나 무장 단체와 접촉하는 경우 성폭력을 당할 위험은 중간 정도이다. 미얀마 전역에서 여성이 젠더기반폭력(GBV), 특히 가정폭력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이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법적 프레임워크

3.114 「형법(1861)」 제377조는 남성 간 성행위를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육체적 접촉'이라는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성소수자(LGBTQIA+) 권리 단체인 ILGA 아시아(ILGA Asia)의 2020년 보고서는 「형법(1861)」 제377조에 따라 만달레이에서 체포가 17건 이상 있었고, 양곤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기간을 특정할 수 없으나 총 50건에 달하는 체포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트랜스젠더도 「경찰법(Police Act, 1945)」 제35조(c) 및 제35조(d)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얼굴을 가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장한 사람” 또는 “주거 구역에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범죄자이므로 트랜스젠더는 반대 성별로 “변장했다”는 근거로 기소될 수 있다. 2025년 본 보고서 발간 시점에 기소가 몇 건 이뤄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법률은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

3.115 2021년 쿠데타 이래, 미얀마 당국은 정치 범죄를 기소하는 것을 성소수자(LGBTQIA+) 탄압 법률을 집행하는 등의 다른 모든 활동보다 우선시한다. 그럼에도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성소수자(LGBTQIA+) 전반이, 그중에서도 특히 트랜스 여성과 '여성스러운 게이 남성'은 당국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 갈취, 성폭력을 당하며, 특히 머궤와 사가잉 같은 분쟁 지역에서 검문소를 통과할 때 이런 일을 당한다.

사회와 가족의 태도

3.116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성소수자(LGBTQIA+)를 대하는 태도는 점차 관용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태도가 특히 더 관용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미얀마 사회는 대체로 보수적이며 성소수자(LGBTQIA+)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공간은 거의 없다. 비정부기구(NGO)인 &PROUD와 컬러스 레인보우(Colours Rainbow)가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성소수자(LGBTQIA+)가 평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했고 성소수자(LGBTQIA+)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데 찬성했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성소수자(LGBTQIA+)인 자녀, 형제자매 또는 정치인을 받아들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게이 남성이나 레즈비언 여성보다 트랜스젠더 남성이나 여성을 받아들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현지 정보원은 트랜스 여성이 눈에 띄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특히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고 보고했다.

3.117 현지 정보원은 2022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미얀마군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집단이며, 동성애를 '외세에 의한 타락'의 증거로 간주한다고 보고했다. 2019년, 저명한 불교 승려는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을 겪은 후 자살한 게이 사서를 조롱했고,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성소수자(LGBTQIA+)를] 때려죽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9년에는 다른 불교 승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외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왜 외국 정부는 ‘쓸모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냐며 의문을 표했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정치적 대항 세력은 겉으로는 성소수자(LGBTQIA+)를 더 포용하며, 2021년 5월에 국가통합정부(NUG)는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남성이자 성소수자(LGBTQIA+) 옹호자인 아우 밍(Aung Myo Min)을 망명 정부의 인권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성소수자(LGBTQIA+)들은 반쿠데타 시위 운동과 반정부 무장 단체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3.118 성소수자(LGBTQIA+)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후 가족에게 거부당하고 폭력을 당하곤 한다. 학교와 대학에서는 성소수자(LGBTQIA+)에 대한 괴롭힘이 흔하며, 그 결과 많은 성소수자(LGBTQIA+)가 학업을 중단한다. &PROUD가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성소수자(LGBTQIA+)의 42%가 자해한 적이 있고 29%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성소수자(LGBTQIA+)는 미용 산업이나 점술 등 이들에게 어울린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직군 밖에서 자주 고용 차별을 경험한다. 현지 정보원이 2022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성소수자(LGBTQIA+)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도 때로 차별을 경험한다.

3.119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성소수자(LGBTQIA+)의 경험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도시/농촌 격차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부유한 성소수자(LGBTQIA+)는 자신을 학대하는 가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높고, 도시 거주자들은 농촌 마을에서 누릴 수 없는 정도의 익명성을 누린다고 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많은 성소수자(LGBTQIA+)가 차별과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연애 관계를 비밀로 한다.

성소수자(LGBTQIA+)인 반정부 세력 구성원에 대한 대우

3.120 성소수자(LGBTQIA+) 활동가들은 2021년 반쿠테타 시위에서 앞장서서 활약했고, 이후 시위가 진압되는 동안 구금과 폭력의 표적이 됐다. 국가통합정부(NUG)의 2021년 6월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권의 시위 진압 작전 시기에 성소수자(LGBTQIA+) 12명이 살해됐고 73명이 체포됐다. 다른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LGBTQIA+) 활동가들은 2021년 쿠테타 이후 정권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법적 조치와 폭력에 시달렸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는 만달레이 성소수자 연합(LGBTQ Union) 회장인 저스틴 민 헤인(Justin Min Hein)이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 2023)」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10년을 선고받았다.

3.121 2023년에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성소수자(LGBTQIA+) 전반이, 그중에서도 트랜스 여성과 '여성스러운' 남성은 구금 중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비롯해 더욱 가혹한 학대에 시달린다. 2021년, 트랜스 여성인 시위자 한 명은 심문관에게 12시간 동안 억류당하면서 병으로 강간당하고 담배로 유두가 지지지는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인접 국가로 도피한 성소수자(LGBTQIA+)는 여전히 착취와 성적 학대에 취약하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불법 이주자라는 지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호주 외교통상부\(DFAT\) 태국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참조).

3.122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미얀마에서 성소수자(LGBTQIA+)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경찰에게 체포나 갈취 등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라고 평가한다. 고용, 의료, 가족 생활에서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이다. 또래나 가족에게 폭력을 당할 위험도 중간 정도이다. 정치적 반대 활동에 참여하는 성소수자(LGBTQIA+)는 정치적 견해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폭력과 공적 차별을 당할 위험이 높다.

장애인

3.123 「장애인권리법(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 2015)」에서는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한다”고 명시한다. 이 법은 장애인이 교육, 주택,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할당을 설정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미얀마에서 장애인은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며, 상황은 2021년 쿠테타 이후 악화했다.

3.124 2024년 유엔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은 약 600만 명, 즉 미얀마 인구의 약 12%에 달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습, 지뢰, 무력 분쟁으로 인해 새로 장애가 생긴 사람이 늘고 있다.

3.125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21년 쿠테타 이후 장애인이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고 일상생활에 참여할 능력은 크게 축소됐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우려하는 가족도 이 같은 상황에 일조했다. 지적장애인들은 국가행정위원회(SAC)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바 있다. 사지 결손처럼 평생 눈에 띄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최근 반정부 전투에서 사지를 잃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문소에서 공무원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3.126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공적인 장애인 정책이 있다고 해도 정책은 권한 부여보다는 자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국가통합정부(NUG)의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고용 차별은 흔하며,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정부기구(NGO)조차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열악한 경제 상황도 장애인의 취업 기회에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이 줄어드는 일자리를 놓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이다.

3.127 국가행정위원회(SAC)가 지배하는 지역과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장애인에게 제한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수는 적지만 비정부기구(NGO)가 운영하는 청각장애인 학교가 만달레이와 양곤에 있다.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어디서나 재활 서비스, 장애 보조기구, 인공 수족 등이 부족하다. 해당 현지 정보원은 국가행정위원회(SAC)가 극소수 장애인에게 수당으로 3만 쉿(22호주달러)을 비정기적으로 지급했지만, 많은 장애인이 군부 정권과 연루될까 봐 수당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밝혔다. 국가통합정부(NUG)와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도 그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소수의 장애인에게 수당으로 3만~5만 쉿(22-36호주달러)을 비슷한 식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3.128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일관되지 않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는 대체로 청각장애인을 우호적으로 대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처럼 미얀마에서 낯설게 여겨지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관대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에 초자연적 의미를 부여한다. 예컨대 전생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귀신이 빙의해서 장애가 생겼다는 것이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몇몇 산 공동체에서는 구순구개열로 태어난 아동을 차별하는 미신을 믿는다.

3.129 때로는 가족이 장애 아동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긴다. 낙인 때문에,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 분쟁과 학대자로부터 장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산주에서 장애인을 족쇄로 묶었다는 보고들이 제각기 들어온 바 있는데, 이 또한 나름대로 장애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이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는 흔하며, 주로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특히 이들 중에서도 어린 소녀가 피해를 입는다.

3.130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장애인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며, 통합교육과 고용 기회 부족, 충분하지 않은 국가 지원과 보호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낮고 검문소에서의 괴롭힘 등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이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처럼 사회에서 낯설게 여기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이 중간 정도이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특히 이들 중에서도 어린 소녀가 성적 착취와 학대를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라고 평가한다(‘여성’ 항목과 ‘아동 및 청소년’ 항목도 참조).

아동 및 청년층

3.131 「아동권리법(Child Rights Law, 2019)」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법은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 무력 분쟁으로 인한 징집, 방치, 착취, 납치, 자의적 구금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규정한다. 「아동권리법(2019)」은 실제로는 효과가 없으며,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과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 모두가 아동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자행한다는 보고가 속출했다.

3.132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사무소(UN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에서는 2021년 2월부터 아동 징집 및 동원 사례 280건, 아동 살해 또는 신체 훼손 사례 170건, 아동 납치 및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례가 소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미얀마군이 아동을 인간 방패와 인간 지뢰 탐지기로 사용했다는 증거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아동을 징집하고 동원했다는 증거가 잘 갖춰진 보고가 이뤄진 바 있다. 2023년 라카인주에서 군부가 미성년자를 징집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본 보고서 출간 시점에서 이러한 보고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보고에 신빙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또한 시민방위군(PDF)이 정부의 공직자 및 정권 지지자를 공격할 때 아동이 살해되고 신체가 훼손되기도 했다(‘정치적 견해’ 항목도 참조).

3.133 많은 아동과 청년이 방관자 또는 적극적 참가자로서 2021년 반쿠데타 시위에 참여했다. 2022년 6월, 유엔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아동 1,400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됐다고 밝혔다. 현지 정보원이 2022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많은 아동이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성인 교도소인 인세인 교도소는 미성년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아동이 성인과 함께 수감된 경우도 있다. 2021년 쿠데타 이후에는 아동을 인질로 잡아 가족이 당국에 자수하도록 강요했다는 보고가 속출했지만, 현지 정보원은 2023년 말에 이르러 이러한 관행이 줄어들었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했다.

3.134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수많은 청년층이 시위 운동과 반정부 세력에 가담하면서 정권이 그들을 특정해 감시하고 탄압했다고 한다. 현지 정보원은 당국이 시민방위군(PDF) 공격 이후 청소년을 무작위로 검거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친정부 성향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청년층을 ‘Z세대 테러리스트’ 또는 ‘탈레반 Z세대’로 묘사하는 등 혐오 발언을 한 예도 있었다. 미얀마에서 정치 범죄로 구금된 청년들은 고문과 성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정치적 견해’ 항목도 참조).

3.135 「아동권리법(2019)」에서 규정한 최소 결혼 연령은 18세이다. 그럼에도 조혼은 미얀마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발생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조혼은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쿠데타 이후 더 흔해졌으며, 특히 친주, 까인주, 까야주, 산주, 라카인주 등 분쟁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노동하거나 교육받지 않는 청소년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가족의 바람에 따라 조혼이 늘어났다. 조혼은 남녀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녀가 조혼이 교육과 경제적 권한 부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느낄 가능성이 높다(‘여성’ 항목도 참조). 인신매매, 아동 노동, 아동 성 착취 문제도 특히 국경 지역에서 심하다(‘인신매매’ 항목도 참조).

3.136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십대를 포함한 청년·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항 운동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관여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자의적 구금 등 공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중간 정도, 온라인 혐오 발언 등 사회적 차별을 겪을 위험은 낮다고 평가한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의 자녀가 인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 자의적 구금 등 공적 괴롭힘을 당할 위험은 중간 정도이지만, 이는 나이 때문이라기 보다는 부모의 정치적 배경 때문이다 (‘정치적 견해’ 항목도 참조).

4. 보충적 보호 사유

자의적 생명 박탈

초법적 살해

4.1 군대, 경찰, 어용 민병대인 뿌조디 등과 미얀마의 보안군, 그리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기타 무장 단체가 초법적 살인을 자행한다는 보고가 속출했다. 2021년 쿠데타 이전에는 초법적 살인이 분쟁이 활발한 지역에 집중됐지만, 쿠데타 이후에는 전국에서 일어난다고 보고됐다.

4.2 인권 단체인 난 린 틱 아널리티카(Nyan Lynn Thit Analytica)의 2024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 병력은 2021년 쿠데타 이래 '학살'(5명 이상 살해)을 200건 넘게 저질러 비무장 민간인을 2,000명 넘게 살해했다. 군부 병력이 시위자, 의료 인력, 시민불복종운동(CDM) 참가자, 분쟁 지역의 민간인, 특히 무장 세력을 숨기거나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 등 개인을 불법 살해했다는 보고가 속출했다. 당국이 자행한 구금 중인 수감자에 대한 초법적 살인에 대한 정보는 '구금 중 사망' 항목을 참조한다.

4.3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와 시민방위군(PDF)은 정권 공직자, 연방단결발전당(USDP) 당원, 군부 정권 지지자, 이들의 가족을 표적 암살하는 형태로 초법적 살인을 자행했다. 또한 부역자와 정보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때로는 이들이 정권에 부역했다는 증거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는데도 살해했다('부역자와 정보원' 항목 참조).

강제 실종 또는 비자발적 실종

4.4 미얀마에서 강제 실종은 2021년 쿠데타 이전에도 발생했는데, 특히 라카인주와 기타 분쟁 피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강제 실종은 주로 보안군이 자행했으나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와 범죄 조직도 자행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강제 실종은 크게 증가했고 전국으로 확산했다.

4.5 2021년 8월,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정치범의 82%, 즉 약 5,000명이 미얀마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수치는 이후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카렌인권단체(Karen Human Rights Group)의 2023년 11월 보고서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남동부에서 강제 실종이 150건 이상 일어났고 실종자는 주로 15~25세 남성이었다고 기록했다. 강제 실종은 경찰, 군대, 어용 민병대, 비국가 집단이 저질렀다.

4.6 가족들은 친지가 체포될 때 거의 통보를 받지 못하며, 체포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재판에 출석할 때까지 행방이나 생사 여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남성과 소년이 강제 실종의 표적이 되지만, 모든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강제 실종 위험에 처해 있다. 강제 실종 피해자들은 고문과 초법적 살인을 당한다.

구금 중 사망

4.7 정치범지원협회(AAPP)의 2024년 3월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거의 1,700명이 군부에 의해 구금당한 뒤 '폭력 또는 방치로 인해' 사망했다.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군부에 의해 구금된 사람 중 상당수가 체포 24시간 이내에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그 외의 사람들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나중에 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4.8 당국이 구금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한다는, 특히 다른 구금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살해한다는 보고가 속출한다. 당국은 교통사고나 탈출 시도 탓에 사람이 죽었다는 식으로 살해를 은폐하곤 한다. 2023년 7월,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2023년 6월에 구금 중 살해되거나 실종됐다고 보고된 정치범 37명의 자세한 신상을 공개했다.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3년에는 미얀마 교도소에서 즉결 처형이 실시됐으며, 당국은 이 때도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죽었다고 타트했지만 목격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일렬로 세워진 후 근거리에서 총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형

4.9 미얀마에서는 사망을 초래하는 범죄, 국가에 대한 범죄, 마약 밀매, 군사 범죄, 테러를 합법적인 사형으로 처벌한다. 사형은 살인, 마약 밀매, 마약 소지가 관련된 사건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2021년 쿠데타 이전에 사형은 상당히 드물게 선고됐고, 1976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 선고 수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급증했다.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176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4.10 2022년 7월, 군부 정권은 미얀마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뒤 40년 만에 처음으로 사법 처형을 집행했다. 처형된 수감자들은 저명한 민주화 운동 활동가 2명과 정권의 정보원으로 알려진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2명이었다. 이러한 처형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2025년 본 보고서 발간 당시까지 미얀마 내 추가 사형 집행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4.11 법원은 「형사소송법(Code of Criminal Procedure, 1898)」 제368조와 「계엄령 명령 3/2021(Martial Law Order 3/2021)」에 따라 사형 선고를 계속하고 있다. 후자에 따라 민간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죄를 포함해 여러 가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군사법원에서 선고를 받으면 항소권이 없다.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은 자신들의 통제 지역에서 공개 처형을 집행했다. 처형된 남성은 총 7명으로, 일부는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군인이고 나머지는 납치 및 살인 혐의를 받은 현지 주민이었다.

고문

4.12 미얀마 보안군이 신체적·심리적 고문을 가했다는 보고가 속출했는데, 여기에는 구타, 고통스러운 자세 취하게 하기, 화상 입히기, 신체 절단, 전기 충격, 모의 처형,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수면 박탈, 음식·물·약 박탈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위협과 언어적 학대, 탈의 강요, 변기 물 마시기 강요 등의 학대도 보고된 바 있다.

4.13 2021년 쿠데타 이전, 고문은 민족 간 분쟁 지역에서 더 흔하게 일어났다. 유엔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2021년 3월 라카인주와 친주에서 발생한 '자의적 구금 사례 중 절대 다수'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기록됐다고 보고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보고에 따르면 고문은 미얀마 전역으로 퍼져, 특히 정치범과 시민방위군(PDF) 및 민족 무장 집단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도 가해졌다. 고문은 구금 장소, 특히 군 심문 센터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교도소, 경찰서, 군 기지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시신은 대부분 고문의 흔적을 보인다.

4.14 미얀마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당사국이 아니며, 고문은 별개의 범죄나 특별한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밝힌 바에 따르면, 보안군이 고문을 가해도 처벌을 면해주는 문화 때문에 고문이 조장됐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인지한 범위 내에서는 시민방위군(PDF)이나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자행한 고문 사례가 없지만, 이러한 집단들이 성폭력과 초법적 살해 등 다른 학대를 저지른다는 보고가 있다. 어용 민병대인 뽀조디(Pyu Saw Htee)도 고문을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의적 체포 및 구금

4.15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에 2만 7,000명 이상이 정치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근거는 대체로 「형법(1861)」 제505A조와 대테러법이었다(‘정치적 견해’ 항목도 참조). 2만 명 이상이 구금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이 기소되기 전 수 주, 심지어 수 개월 동안 구금된다. 구금된 사람 대다수는 법적 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으며,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로 사건을 수임하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모자라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현지 정보원이 2024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국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기 어렵게 방해하곤 했으며, 피고인 대다수는 재판 당일까지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4.16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특히 군 심문 센터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보안군은 수사 대상자를 찾지 못할 경우, 노부모 등 가족을 대신 구금해 당사자가 자수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2024년 1월, 군부 정권은 미얀마 교도소에서 9,000명 이상의 수감자를 사면하고 석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사면 및 석방 예정자의 대부분이 정치범이 아닌 일반 범죄자와 외국인 수감자였다고 보고했다.

5. 기타 고려 사항

국가 보호

군

5.1 미얀마 군은 육군, 해군, 공군의 3개 군으로 구성된다. 독립 당시부터 군은 유력한 국가 기관이었으며, 1962년 이후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때부터 상당 기간 미얀마를 통치했다. 2024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Global Firepower Index)에 따르면,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역병은 약 15만 명에 달한다. 미얀마 군의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 과장되었던 수치가 수정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병 모집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질병, 탈영, 전투 중 사망, 항복, 사직, 퇴역 때문이기도 하다.

5.2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는 군이 민간인에게 무제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2021년 쿠데타 전후로 군부 병력들은 초법적 살인, 고문,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방화, 무차별 포격 및 공습, 민간 지역 지뢰 매설 등으로 인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인권 침해는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보안군 감시단(Security Force Monitor)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미얀마군 고위 지휘관의 60% 이상이 휘하 부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른바 ‘도깨비 부대(Ogre Columns)’, 즉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수색 및 파괴 임무를 담당하는 보병 부대가 특히 인권 침해와 무차별 살해로 악명 높았다.

5.3 2021년 쿠데타 기간과 그 이후 미얀마군의 행동으로 인해 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국민에게도 위신을 크게 잃었다. 그 결과 군은 장교 및 사병 징집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방대학(National Defence College) 지원자는 2021년 쿠데타 이전 연간 2,500명에서 2023년 약 400명으로 감소했다. 현지 및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말과 2024년 초 반정부군과의 전투 이후 수천 명의 정부 군인이 항복했고, 그 외에도 수천 명이 탈영하거나 망명했다. 2022년에 미얀마군은 탈영에 대한 최대 형량을 2년에서 5년으로 높였다. 2024년 2월에 군부는 징병제를 시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2025년 본 보고서 출간 시점에도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미성년자가 징집되었다는 보고를 포함해 강제 징집이 실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징병제 및 강제 징집’ 항목도 참조).

5.4 미얀마군 병력은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를 저질러도 면책된다. 최근 몇 년간 군사법원에서 인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난 소수의 사례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자는 하급 장교였고 선고된 형도 짧았다. 2018년 4월, 7명의 군인이 2017년 라카인주의 인 딘(Inn Din) 학살에 연루된 혐의로 강제 노역을 동반한 징역형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1년도 안 되어 석방됐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저질러진 인권 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처벌받은 군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경찰

5.5 미얀마 경찰(Myanmar Police Force)은 분쟁 지역 이외 지역과 중앙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 내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지만, 때로는 군대와 함께 분쟁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 속하는 미얀마 경찰(Myanmar Police Force)은 약 10만 명의 인력을 보유하며, 군대식으로 '임관' 장교와 최전선에 배치되는 '사병' 계급으로 나뉜다. 주와 자치구에는 자체 경찰력이 있으며, 다양한 부서가 특별 분과(Special Branch), 철도 경찰(Railways Police) 등 전문 기능을 수행한다. 미얀마 경찰(Myanmar Police Force) 중 여성은 약 5%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젠더기반폭력(GBV)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6 '장교' 계급은 교육 수준이 더 높고 지역 기준으로 보면 유능하다고 하지만, 미얀마의 하급 경찰은 일반적으로 훈련을 잘 받지 못하고 장비도 부실하다. 문서 관리 시스템과 여타 시스템은 지방에서,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구식이고 수준이 낮다. 전국적인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며,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범죄자가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동해 체포를 피하기는 비교적 쉽다.

5.7 미얀마군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경찰(Myanmar Police Force)의 대중적 평판과 사기도 쿠데타로 인해 심하게 떨어졌다. 미얀마 경찰(Myanmar Police Force)은 구타, 초법적 살인, 고문, 성적 학대, 자의적 구금을 포함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는 혐의가 있다. 보고에 따르면 신입 경찰 모집은 급격히 감소했고 수천 명의 경찰이 탈영했다. 2023년, 미얀마 경찰은 인력 손실을 막기 위해 경찰관의 정년 연령을 올렸다.

5.8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경찰(Myanmar Police Force)은 점점 더 군사화됐다. 군부가 제정한 「미얀마 경찰법(Myanmar Police Law, 2022)」에 따르면 경찰은 군에 의해 직접 통제되며 '안보와 국방과 관련된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군 군인 수천 명이 경찰로 '전환'됐고, 지역 경찰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최전방 전투에 계속 투입됐다고 한다.

법률 체계

5.9 미얀마의 민간 사법 체계는 4단계의 법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대법원, 주 및 지역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자치구·자치지대 법원, 지구 법원이 그것이다. 「2008년 헌법」은 군사법원이 미얀마 군 인력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결하도록 규정한다. 주 및 지방에서 민사 사건은 사법부가 아니라 관료 조직에 의해 관리되곤 한다. 형사 사건은 마을 치안 판사가 재판하나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상정될 수 있다. 강간 같은 일부 유형의 범죄의 경우,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는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분쟁 해결 체계가 작동한다. 현지 정보원이 2024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여성은 이러한 체계 하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5.10 2021년 3월 15일에 군사 정권은 「계엄령 3/2021(Martial Law Order 3/2021)」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이 적용되는 국가의 일부 지역(2025년 본 보고서 출간 시점 당시에는 양곤과 만달레이의 11개 지구)에서는 민간인이 특별 설립된 군사 재판소에서 다양한 혐의로 재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판소는 군법무감(military Judge Advocate General)이 주재하며, 다른 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권한을 가진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포함한 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군사 재판소가 개최하는 재판은 약식이었고 피고인은 법정 대리권이나 군 통수권자 이외의 자에게 항소할 권리가 없었다.

5.11 미얀마의 사법 체계는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으며, 판사는 대체로 독립성이 없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2021년 쿠데타 이후 특히 심각해졌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는 진행 중인 문제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20년 법정에 간 미얀마인 중 27%가 뇌물을 지불했다고 보고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과 연결된 판사 여러 명을 위협적으로 해임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판사로 교체했다.

5.12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원과 반쿠데타 활동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자의적으로 구금됐으며,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고 한다. 정권 공직자와 보안군이 변호사와 판사를 위협했다는 보고가 있다. 군인들은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려는 변호사에게 총을 겨누거나 경고 사격을 한 바 있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적어도 판사 한 명이 정치범에게 최대 형량을 선고하지 않은 후 직위에서 해임됐다.

5.13 2021년 5월, 군부는 「법률 구조법(Legal Aid Law)」을 개정해 빈곤층이 법률 구조를 받는 것을 매우 어렵게 했고, 학대가 대체로 공판 전 구금 시기에 발생함에도 이 기간에 법률 구조를 받을 권리를 삭제했으며, 무국적자·망명 신청자·외국인·이주 노동자에게는 법률 구조를 거부했다.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구금된 이들은 법정에 출석할 때까지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14 「2008년 헌법」 제374조는 일사부재리를 규정하며 “관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급 법원이 판결을 무효화하고 재심을 명령하지 않는 한 재심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유사한 조항이 「연방 사법법(Union Judiciary Law, 2010)」 제6조에서 발견된다.

구금 및 교도소

5.15 2023년,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미얀마에 알려진 교도소만 50개, 알려진 노동 수용소만 50개가 있다고 보고했다. 2021년 10월, AP통신 (Associated Press)은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대가 마을 회관과 같은 많은 공공 시설을 심문 센터로 개조했다고 보고했다. 이런 센터는 반쿠데타 시위 이후 검거된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데 사용됐고, 수용된 이들은 장기 구금 시설로 이송되기 전 심문을 받았다. 일단 구금된 이들은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거나 심지어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됐는지도 모르는 채로 수 주 또는 수 개월 동안 미결 상태로 구금될 수 있다.

5.16 재판을 받지 않고 구금된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범도 일반 수감자와 함께 구금되곤 한다. 여성은 대체로 별도의 시설에 구금되지만, 거의 항상 남성에게 체포당하고 심문당한다. 아들은 ‘소년 훈련생’으로 간주되며 별도로 구금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성인과 거의 다르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학대와 방치로 인해 구금 중 사망했다는 보고가 속출한다.

5.17 2020년 이전,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구금 시설 방문을 허가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외부의 모든 방문이 공중 보건을 이유로 거부됐다. 2023년에 현지 정보원이 기술한 바에 따르면, 교도소와 노동수용소 모두 열악하고 과밀한 상태였다. 수감자들은 의약품과 보건 서비스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며,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수감자들이 생명에 직결되는 치료를 거부당하면서 구금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 및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부정부패는 교도소와 노동수용소 양쪽에서 모두 흔하며, 수감자들은 물, 의복, 기타 필수품을 받거나 다른 수감자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직위를 부여받기 위해 간수에게 뇌물을 준다고 한다.

국내 재정착

5.18 「헌법」 제355조는 시민이 “법률에 따라 미얀마 연방 내 어느 곳이나 정착하고 거주할” 권리를 보호한다. 그럼에도 미얀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동의 자유를 제약받는다. 과거에 이러한 제약은 주로 분쟁이 활발한 지역(예: 라카인주)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미얀마 거의 어디서나 다양하게 이동을 제한당한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당국에서는 도시와 주요 도로에 보안 검문소를 늘렸다. 2021년 2월, 군부는 「구·촌락지구 행정법(Ward or Village Tract Administration Law, 2012)」을 개정해 주민이 가정집에서 숙박하는 손님을 전원 신고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규정은 2016년에 한 차례 폐지된 바 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5.19 미얀마 내에서 재정착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벽에 직면한다. 일부 소수민족 구성원은 버마어를 하지 못해서 버마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재정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이주하는 지역에 기존의 가족 및 친구 등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착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독신 여성은 경제적 기회 부족과 일반적인 불안정 상황으로 인해 특히 재정착하기 어려워한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많은 사람이 시위와 시민불복종운동(CDM) 참여 등 반정부 활동 때문에 체포되지 않으려고 소수민족 무장단체(EAO)가 장악한 지역으로 도피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지역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EAO)와 미얀마군 간 분쟁이 증가하기도 했다(‘안보 상황’ 항목 참조). 2024년 8월 보고에 따르면, 북부 산주와 기타 지역의 분쟁으로 인해 양곤에 재정착한 국내실향민(IDP) 일부가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당국에게 한층 면밀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귀환자 대우

출입국 절차

5.20 미얀마에는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등 총 3개의 국제공항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선은 양곤에서만 취항했다가, 이후 만달레이와 네피도에서도 국제선 취항이 재개됐다. 미얀마 여권 소지자의 탑승 수속 및 입국 절차는 국제 표준 관행과 유사하지만, 2021년 쿠데타 이후 여행하는 사람들은 출국 전 보안군에게 조사를 받는다. 공항 직원은 예약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여권에 쓰인 이름을 예약자의 이름과 대조 확인한다. 세관 및 입국 심사 직원은 수하물을 검사하고, 입국 심사 직원은 여권 사진이 소지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여권을 스캔한다.

5.21 현지 정보원이 2023년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출국자들은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세부 신상을 정권 수배 목록과 비교하는 ‘군사 검열’을 받았다. 2025년 본 보고서 출간 시점에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검사를 받은 이후 출국이 거부되고 구금된 사람들이 있음을 인지했다. 보고에 따르면 당국이 여행 금지 대상자를 목록에 올릴 때부터 공항 이민 담당관에게 통지가 갈 때까지 최대 48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뇌물을 주고 출국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이런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며 널리 알려진 인사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정치적 견해’ 항목 참조).

5.22 육로를 통해 미얀마에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태국, 라오스, 중국, 인도 국경에 있는 소수의 공식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한다. 또한 국경 지대에는 감시가 없는 긴 구간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비공식적으로 국경을 육로로 건너기도 한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많은 사람이 비공식 경로로 국경을 넘었다. 대부분 태국으로 건너갔으나 인도로, 그리고 때로는 중국으로 간 경우도 있다(호주 외교통상부(DFAT) 태국, 인도, 중국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참조). 2017년 8월 라카인주 폭력 사태 이후 로힝야족 이민자들은 비정규 해상 경로를 통해 라카인주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넘어갔다. 2024년 5월, 군부 정권은 미얀마와 중국, 태국, 인도 간 국경을 육로로 넘는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보고에 따르면 이는 병역 기피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방식의 [고유식별\(UID\) ‘스마트 카드’](#)가 도입됐다.

5.23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당국이 수배하는 사람이 항공기로 안전하게 출국하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당사자의 중요도와 신분 증명 서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당국이 수배하는 사람이 육로를 통해 몰래 국경을 넘어 인접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먼저 국내 검문소의 검문을 피하고 어려운 지형을 통과해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한다.

귀환자를 위한 조건

5.24 귀환자 면접 심사는 미얀마의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가 담당한다. 단, 예외적으로 로힝야족 귀환자는 사회복지·구호·재정착부(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가 관리한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귀환자에게 격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 법률 지원, 훈련 과정, 학교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이용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리적 제약과 역량 제한으로 인해 귀환자의 약 40~60%만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25 2021년 쿠데타 이후 약 10만 명이 육로를 거쳐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6만 명이 귀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데타 이전, 태국 출신 난민(주로 카렌족)은 정식 지원을 받는 자발적 귀환 절차를 거쳐 미얀마로 귀환할 수 있었다. 이들은 최대 1년이 걸리는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시민권확인증(CSC)을 발급받으면(‘국가 신분증’ 항목 참조), 미얀마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현지 정보원이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이 제도를 통해 태국에서 귀환한 사람은 없고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5.26 이주자들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주로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인접 국가에서 미얀마로 송환됐다. 쿠데타가 발생한 지 3일 후,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미얀마 이주자가 말레이시아에 남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미얀마 군부가 이주자 1,086명을 해군 함정 세 척에 실어 미얀마로 귀환시키겠다고 제안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락했다. 말레이시아는 모든 귀환자가 자발적으로 귀환했으며 그들 중 누구도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귀환자들은 지역사회로 송환되기 전에 양곤에서 격리되어야 했다. 불법 출국했다가 미얀마로 귀환한 이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현지 정보원은 이러한 처벌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고 호주 외교통상부(DFAT)에 말했다.

5.27 2017년 11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라카인주 실항민 귀환 협정(Agreement of Return of Displaced Persons from Rakhine State)’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미얀마는 라카인주에 거주하다가 2016년 10월과 2017년 8월의 공격 이후 방글라데시로 떠난 주민이 과거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2018년 1월 로힝야족 실항민의 송환을 시작하고 2년 이내에 그 과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어용 신문인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2021년 5월 기사에서 협정 체결 후 로힝야족 790명이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자발적으로’ 귀환했다고 보고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족이 대규모로 송환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하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 방글라데시 국가정황정보 보고서](#)도 참조할 것.

5.28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미얀마에 출입국하는 사람들이 고강도로 조사받는 점,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권을 비판하거나 서방 국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심각한 대가(‘정치적 견해’ 항목 참조)를 치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되어 돌아온 사람은 원래 미얀마를 떠난 이유와 관계없이 공적 괴롭힘, 자의적 구금, 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다.

신분 증명 서류

5.29 미얀마 당국은 출생 및 사망 증명서, 국가 신분증, 가구 명부, 여권을 포함한 다양한 신분 증서 및 기타 공식 문서를 발급한다. 개인이 어떤 문서를 소지하는지는 시민권 등급(시민, 귀화, 준시민권 – ‘인종/국적’ 항목 참조)과 미얀마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부패한 관료 체계와 협상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고향을 떠나야 했던 많은 사람은 신분 증명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시민방위군(PDF)이 구 행정 사무소를 공격하고, 직장이 폐쇄되고, 일반 대중이 정권을 대표하는 관료와 상호작용하기를 꺼리면서 많은 사람이 2021년 쿠데타 이후 새 서류를 신청하거나 기존 서류를 갱신할 수 없었다.

출생 및 사망 증명서

5.30 「구·촌락지구 행정법(2012)」에 따르면 출생과 사망은 모두 구 또는 촌락 행정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일의 징역형 또는 5,000껏(약 5호주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31 시민은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사회, 교육,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시민은 고등 교육 및 취직 기회를 거부당할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정부는 출생 신고 절차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국 캠페인을 실시했고, 2017년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5세 미만 아동은 20% 미만인 것으로 보고됐다. 도시 지역에서는 아동 대다수가 출생신고되는 반면, 외딴 지역에서는 아동이 출생증명서를 가진 경우가 거의 없다. 라카인주에서 아동이 출생신고 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특히 로힝야족 아동은 출생증명서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로힝야족 항목 참조). 사망신고는 특히 보건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농촌 지역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된다. ‘아동 및 청소년’ 항목을 참조한다.

국가 신분증

5.32 미얀마 독립 이후 다양한 법률에 따라 각종 신분증이 발급됐다.

- **국가등록증(NRC):** 흔히 ‘세 번 접히는 카드’라고 불리는 국가등록증(NRC)은 1949년부터 1989년 사이 「거주자 등록법(Registration of Residents Act, 1949)」에 따라 발급됐다. 국가등록증(NRC)은 시민권에 근거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며 민족이나 종교를 기록하지 않는다. 국가등록증(NRC)은 시민권확인증(CSC)으로 바뀌었으나 신분증은 여전히 ‘국가등록증(NRC)’이라고 불린다. 2017년에 정부는 네피도, 만달레이, 양곤 지역, 라카인주에서 종이 국가등록증(NRC)을 전자 카드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1990년대 초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국가등록증(NRC)을 반납한 로힝야족과 라카인 무슬림은 그 대가로 시민권확인증(CSC)을 받지 못했다.
- **임시등록증(TRC):** ‘백색 카드’로 불리는 임시등록증(TRC)은 국가등록증(NRC)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사람에게 임시로 제공할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5년부터 미얀마 당국은 1982년 「미얀마 시민권법(미얀마 Citizenship Law)」에 따라 국가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자들에게 “시민권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라는 구실로 임시등록증(TRC)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임시등록증(TRC)은 2015년 취소됐고 대신 임시승인증(TAC), 일명 ‘백색 카드 영수증’이 발급됐다. 임시승인증(TAC)은 법적 발급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시민권에 근거한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 **시민권확인증(CSC):** 1982년 「미얀마 시민권법(Myanmar Citizenship Law)」에 따라 도입된 시민권확인증(CSC)은 시민권 범주에 따라 완전시민권(‘분홍 카드’), 준시민권(‘녹색 카드’), 귀화시민권(‘청색 카드’) 3가지로 발급된다. 시민권확인증(CSC)에는 민족과 종교 정보가 기재되며 여전히 ‘국가등록증(NRC)’이라고 불린다. 로힝야족에게 발급된 시민권확인증(CSC)은 극히 적다. ‘인종/국적’ 항목 참조.
- **국가검증카드(NVC):** 과거 국적확인신분증(ICNVs)으로 불렸던 국가검증카드(‘청록 카드’)는 2016년 이후 시민권 확인 절차를 밟는 중인 사람에게 발급됐지만, 신분 증서나 시민권 증명서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국가검증카드(NVC)는 민족이나 종교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고에 따르면 많은 힌두교도가 귀화시민권확인증(CSC)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미등록 상태이며, 미등록자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국가검증카드를 취득하도록 요구받는다. 2017년 10월부터 국가검증카드 발급과 더불어 생체 데이터가 수집된다.

이민·국가등록부(Immigr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 Department)는 라카인주에서 보안군과 함께 국가검증카드를 발급했다. 많은 무슬림이 당국에 직접 찾아가 카드를 신청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발급은 주로 가구 방문을 통해 시행됐다. 많은 로힝야족은 정부를 깊이 불신하여 국가검증카드 발급절차 진행을 계속 꺼린다.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발급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개인들에게 국가검증카드가 발급됐다는 보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로힝야족’, ‘시민권’ 항목 참조).

- **고유식별카드(UID), 일명 ‘스마트 카드’:** 2024년 5월, 군부 정권은 새로운 10자리 고유식별(UID) ‘스마트 카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카드는 미얀마와 태국,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을 육로로 넘는 데 필요하다. 이민·인구부(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에 따르면 새로운 고유식별카드(UID) 발급은 무료이며 신청 시 비용을 청구받으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 발급이 수 개월간 지연되며 당일에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최대 200호주달러를 뇌물로 제공해야 한다는 보고가 속출한다.

가구 명부

5.33 「구·촌락지구 행정법(2012)」에 따라 미얀마 전역에서 촌락 및 구 행정관은 출생·사망신고를 받고 등록하며 가구 명부에 주민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각 세대는 이주와 결혼을 포함해 모든 변동 사항을 지구 행정 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관할 구역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2017년 보고한 바에 따르면 라카인주에서 개인이 한 가구 명부에서 다른 명부로 전입하려면 기존 가구 명부 사본, 혼인 증명서, 신분증 사본, 구 또는 촌락 당국의 추천서가 필요했다. 또한 당국이 요청하면 각 세대는 당국에 명부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가구 명부는 이민·인구부(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와 내무부에 의해 발급되고 업데이트된다.

5.34 가구 등록은 신분 증명 서류 발급, 학교 등록(특히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 서비스 이용(보건, 전기, 물 포함), 결혼, 여행 허가에 필요하다. 2015년 임시등록증(TRC)이 만료된 이후(‘로힝야족’, ‘국가 신분증’ 항목 참조), 많은 로힝야족에게 가구 명부는 유일한 신분 증명서였다.

5.35 2017년,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라카인주 주민이 연례 점검 기간에 허가 없이 집을 비웠다가 가구 명부에서 삭제된 사례를 보고했다. 또한 가구 명부에서 삭제된 후 해외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민 관련 범죄로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가구 명부에서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뇌물이 오갔으나 액수는 현지 기준으로 보아도 높았다. 중부 라카인주에서 가구 명부 일부는 2012년 폭력 사태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2017년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16년 이후 로힝야족이 가구 명부에 새로 출생한 가구원을 추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고했다.

5.36 미등록된 사람이 적발되면 최대 7일간 구금형으로 처벌되며, 당사자는 이 기간 내에 자신이 가구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세대주에 의해 가구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2018년 유엔 진상조사단(UN Fact-Finding Mission)은 안보 작전 이후 미얀마를 떠난 로힝야족의 대다수가 과거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지었다. 2021년 2월, 군사 정권은 「구·촌락지구 행정법(2012)」을 개정해 가정집에 숙박하는 모든 손님을 신고하는 규정을 재도입했는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런 규정이 사생활권을 침해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여권

5.37 미얀마는 2015년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전자 여권'을 도입했다. 전자 여권은 내장된 스마트 카드 칩에 개인 정보와 생체 정보를 저장한다. 여권 발급 센터는 전국에 17개, 모든 주와 지역에 적어도 하나씩 있다. 여권을 취득하려면 시민은 시민권확인증(CSC), 가구 명부, 출생 증명서, 스마트 카드(UID)를 제시하고 발급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권 신청자는 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센터에서 공식 사진을 찍는다.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업무 처리에 근무일 기준 10~15일 걸린다고 명시하지만 처리 기간은 사무소에 따라 다르다. 여권을 취득하고 신속히 처리하려면 흔히 뇌물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된다('사기 만연' 항목 참조). 보고에 따르면, 뇌물 액수가 충분히 크다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요건 상당수를 우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해외 여권 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5.38 비버마 민족인 사람은 따로 줄을 서야 하고 추가로 심사를 받으며 추가로 뇌물을 요구받는 등 여권 담당 직원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대우를 자주 받는다고 보고한다('남아시아계 주민' 항목 참조). 2022년 5월, 현지 언론은 정권이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불복종운동(CDM) 참가자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여권 사무소에서 참가자 명단이 회람됐다고 보고했다. 2021년 6월, 군부는 국가통합정부(NUG) 구성원과 기타 정권 반대자의 여권 수실했던 개를 무효화한다는 서한을 호주를 포함한 여러 외국 정부에 보냈다.

만연한 사기

5.39 서류 사기는 미얀마에서 매우 만연해 있다. 사기는 서류 위조 또는 가짜 정보를 근거로 진본 문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일어난다. 미얀마에 부정부패가 만연함에 따라 가짜 신분 증서는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가구 등록 명부, 국가등록증(NRC), 시민권확인증(CSC), 국가검증카드(NVC) 등 신분 증명 관련 문서는 모두 흔하게 사기의 대상이 된다. 또한 청소년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신분 증서에 거짓 생년월일을 기입한다는 보고도 있다. 여권은 더 정교한 보안 기능을 갖췄지만, 가짜 국가 신분증을 이용해 여권 진본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5.40 2025년 본 보고서 발간 시점에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가짜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공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